



2020.12.31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보고서 | 20-12호

중국의 미래, 2030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미래를 중심으로

유재광, 조은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중국의 미래, 2030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미래를 중심으로

연구진

| 외부 연구진 |

유재광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조은교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동북아산업실장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우호 및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이에 기반한 양국 간의 문화교류는 잊혀져있던 양국 간 문화적 유사성과 공동의 역사를 재발견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중 관계는 위기입니다.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양국의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은 외교 및 안보 그리고 문화 심지어는 경제영역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갈등과 경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역사적이게도 한국 내부의 중국 연구에 대한 폭발적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한국의 대중 관계에 있어 중국의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30년경의 중국의 미래 모습을 종합적으로 예측해 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를 정치와 경제 그리고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 예측을 종합해서 향후 중국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이 무엇일지를 선제적으로 고민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10년 정치적으로 일인 지배 체제에 근거한 권위주의 정치시스템이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경제적으로 현재의 국가주도 시장경제 시스템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외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지금보다 한층 더 악화된 갈등적 관계를 경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중국의 대동아시아 관계 및 일본 관계 그리고 호주와의 관계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와 반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가 2030년경 예측한 중국의 모습은 주변국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겠지만 경제적인 성장은 유지하는 권위주의적 패권국이라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은 가장 먼저 대중국 무역 의존도 줄이기, 한미 동맹으로의 순차적 강화,

그리고 한·중 간의 고위급 대화 채널 복원 및 제도화, 마지막으로 상이한 정치제도와 문화에서 기인하는 양국 대중(大衆) 간의 민족주의 다스리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외부연구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조은교 박사는 중국경제 전문성을 살려 중국경제의 10년 후 모습을 거시적으로 조망해 주셨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유재광 교수는 중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예측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연구를 진행해 주신 연구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제1장 서론	1
제2장 중국 정치의 미래, 2030	5
제3장 중국 경제의 미래, 2030	21
제4장 중국 대외관계의 미래, 2030	41
제5장 코로나와 중국의 미래, 2030	69
제6장 중국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전략	75
참고문헌	81
Abstract	93

그림 목 차

[그림 1] 중국 수출액 변화와 국가별 직접투자 증가율	25
[그림 2] 미국과 중국의 2019-2035년 GDP 변화 전망	27
[그림 3] 중국과 미국 일인당 GDP 비교	28
[그림 4] 중국의 수출입 동향 및 FDI 증가율 추이	29
[그림 5] 중국 디지털 인프라 구축현황	30
[그림 6]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설치 현황	32
[그림 7] 중국의 FTA 체결 현황	33
[그림 8] 중국 인구 고령화 추세	35
[그림 9] 중국 일인당 국민소득 및 지니계수 변화 추이	37
[그림 10]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추이	45
[그림 11] 중국의 연도별 국방비 추이	51
[그림 12-1] 미·중 GDP 추이	52
[그림 12-2] 미·중 국방예산 추이	52
[그림 13-1] 중·일간의 GDP 역전	54
[그림 13-2] 중·일간의 군비지출 변화	54
[그림 14] 중·일간 동중국해 갈등	55
[그림 15]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사기지화	59

요 약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을 시도한 소수의 시도 중 하나
- 한국의 미래예측에 있어 중국의 미래예측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
 - 중국의 미래 특히 중국 공산당의 미래는 한국의 외교 및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
 - 중국경제의 미래는 한국의 경제적 생존-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직결된 문제
 - 중국 대외관계의 미래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

2 연구 방법론

□ 사례분석

- 중국정치와 경제 그리고 대외관계 사례연구
 - 중국 권위주의 정당 체제의 변화과정 분석 (1949-2020)
 - 시진핑 집권 후 헌법개정 분석
 - 시진핑 집권 후 중국 내부 권력 관계 분석
 - 중국 경제성장률 (2000-2020) 변화 추이 분석
 - 중국 제조업, 서비스, 하이텍 산업 발전 추이 분석
 - 중·미 관계 추이 분석
 - 중·일 관계 추이 분석

- 중·인도 관계 추이 분석
- 중·호주 관계 추이 분석
- 중·러 관계 추이 분석

- **기술통계분석**

- 중국 GDP 성장률과 성장 패턴 분석
- 중국 제조업 성장률 분석
- 중국 인구변화 추이 분석
- 중국 소득 격차 (Gini Coefficient) 변화 추이 분석

3 본론

□ 연구 내용

- **중국정치의 미래, 2030**

- 권위주의 체제 특성상 중국정치의 미래는 공산당 (CCP)의 미래
- 중국 공산당 미래의 핵심은 주석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힘의 관계
- 연구 결과 현재 시진핑 일인지배체제는 향후 10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중국경제의 미래, 2030**

- 중국경제 미래의 핵심은 중국경제의 성장률
-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중국경제의 향후 6% 이상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중국경제에서 제조업에 기반한 내수중심의 경제성장이 향후 10년 내 한계에 봉착 중국의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임
- 중국경제의 서비스업으로의 전환과 4차산업혁명을 향한 혁신이 향후 10

년간 중국 경제정책의 화두가 될 예정

- 중국경제의 도전도 만만치 않는데 그중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소득 양극화 심화, 경제인구 고령화, 환경오염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

● 중국 대외관계의 미래, 2030

- 중국의 미래에서 가장 불안한 변수
- 중국은 향후 10년간 미국, 일본, 아시아 (특히 인도), 그리고 호주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 높음
- 핵심은 중국의 팽창과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들간의 대립
- 이슈로는 남중국해 갈등, 동중국해 갈등, 인도 중국 국경분쟁, 대만해협, 호주와의 코로나 기원 논쟁/무역보복 문제 등이 핵심

● 코로나와 중국의 미래, 2030

- 코로나와 중국 경제성장과는 부(trade-off) 관계
- 코로나 자체가 중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기 보다 코로나 기원 및 책임론과 관련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향후 중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을 지지하는 국가들간의 대립에 코로나 중국 기원설이 핵심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 농후

4 결론

● 중국의 종합미래상

- 정치적으로 일당/일인 지배체제 유지
- 초고속 성장 대신 완만한 경제성장 지속할 것으로 예측
- 대외관계에서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와는 갈등이 심화되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선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

- **한국의 대응 전략**

- 지나친 대중 무역 의존도 줄이기
- 한·미 동맹으로의 점진적 복귀
- 한·중 고위급 대화 채널 복구 및 제도화
- 한·중 사이 대중(大衆) 기반 배 타적 민족주의 관리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국의 미래는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2년 공식 수교를 한 이후 한국과 중국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는 물론 정치와 문화적 교류 면에서 가히 혁명적인 발전을 경험하였다.

가장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은 기회와 위기 혹은 리스크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수교 30년을 바라보는 지금 한국의 최고의 수출시장은 중국이고 한국의 최대 수입국 역시 중국이다. 중국에게도 한국은 주요 수출국이자 제2의 수입국이다. 이제 중국을 빼놓고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얘기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기회로 보는 시각이 높은 반면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과도한 중국경제 의존에 따른 위험과 리스크에 관한 논의도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나친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안보문제와 결부된 경제보복의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중국경제와의 경쟁 문제 등이 한국의 대중국 경제 관계의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대외 외교·안보정책을 매개로 하여서도 한국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 진행된 중국의 역사적 부상 (historic rise of China)는 미·중 관계를 그 근간에서 뒤흔들고 있으며 이로인한 한미일 삼각 동맹의 미래 역시 규정하고 있다. 이 동맹의 일원인 한국의 미래는 중국이 앞으로 추진할 대외정책 특히 영토분쟁, 미·중 라이벌리 심화, 배타적 민족주의에 근거한 공세적 군사 정책 등과 맞물려 한국의 생존 보장을 위한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과 관련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우방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정치적 면에서도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인접한 국가 중 하나로 여전히 공산당 주도의 일당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런 정치체제가 최근 국내적으로 강력한 경제성장 드라이브와 사회안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어느 때 보다도 애국주의 색채가 짙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고무하고 있다. 이런 정치체제의 특징은 민주주의 공고회를 갈망하는 한국에게 정치체제의 이질성이라는 화

두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시위는 물론 지속되는 신장과 위구르 인권문제 등이 최근의 민족주의적 행보와 맞물려 한국 내 급속한 반중기류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 국가 간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는 한국정부 입장에서 중국 정치와 한국 정치 간의 이질성에서 기인하는 이러한 충돌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중국의 미래를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예측해 보고 이 중국의 미래가 한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가장 객관적인 방식으로 예측해 본다. 이 두 가지의 예측 후 본 연구는 한국이 예상되는 중국의 미래에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련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국 정치 혹은 중국 정치체제의 미래를 현 시진핑 일인지배체제의 강화 여부를 통해 예측해 본다. 제3장에서는 중국경제의 미래를 중국 거시경제 성장 전망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4장에서는 중국 대외관계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 중국이 양자적 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무수히 많으나 이중 중국의 미래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의 대미 관계, 대일 관계, 대아시아와 호주 관계 그리고 대러시아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 대외관계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 제5장에서는 최근 핵심적인 이슈로 급부상하는 코로나-19가 중국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중국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관계의 미래를 종합하여 중국이 2030년경 마주할 미래 모습 혹은 이미지를 식별해 내어 중국의 종합적인 미래상을 제시해 보고 이 미래의 중국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해 본다.

제2장

중국 정치의 미래, 2030

제1장 서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I 서론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 공산당 유일 집권의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을 가진 중국은 헌법에서 중국공산당의 위상과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 헌법은 중국 공산당이 건국과 혁명에서 각 민족을 영도한 주체이고,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 중국 국가체제에서 공산당이 가진 권력의 절대성은 경제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2050년 세계일류강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서도 공산당 영도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2013년에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이러한 ‘공산당영도’를 한층 전면화하고 강화하는 한편, 국가주석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권력의 집중을 제도화하는 등 권력의 집중성과 지속성을 확대해 가고 있다. 권력의 집중성과 지속성의 강화는 중국의 지속가능발전과 중국몽 실현을 위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력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와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시대 공산당의 전면적 영도력이 필요함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²⁾ 공산당의 전면적 영도제도(党的全面领导制度)를 신시대 중국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중 경쟁과 갈등의 심화, 대내적인 빈부격차와 홍콩 민주화 운동 등 정치사회적 도전 속에서 중국은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 영도의 필요성, 집중된 강한 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력의 집중성과 지속성을 중국 부흥의 주요한 기반으로 강조하고 있다.

1) 中华人民共和国宪法. <http://news.12371.cn/2018/03/22/ART11521673331685307.shtml>

2) 刘燕妮. 2020. “新时代加强党的全面领导的关键要素和战略路径.” 中共济南市委党校学报. 2020,(05); 杨彬彬. 2020. “党的全面领导制度:概念、特点与实现机制.” 思想理论教育. 2020,(07)

2020년 초 코로나19 발발 직후 정치사회적 위기 가능성에 직면했던 중국은 이후 강력한 통제와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 회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통치역량, 공산당 영도 체제의 우수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³⁾ 코로나19 위기관리와 빠른 경제회복 상황에서 중국은 대외원조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중국모델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중국공산당 권력의 정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고 있다.

II 중국의 ‘先발전 後민주’, 신권위주의론의 지속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개현대화-공업현대화, 농업현대화, 국방현대화, 과학기술현대화-의 완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국내적으로 민주화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시 덩샤오핑은 4항기본원칙을 내세우면서 공산당 영도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타협은 없다는 점을 명백히하였다. 4항기본원칙은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인민민주독재, 공산당 영도의 지속, 맑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 견지>로 시장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치이념과 체제에 대한 도전과 위협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체제 유지를 기반으로 한 4항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 ‘1개중심 2개기본점 원칙’⁴⁾을 명백히 하면서 국가발전전략을 지속하였다.

1. 권력구조 : 중국공산당 영도의 당국가체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 시장화, 개방화 노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와 공산당 영도 원칙을 고수하는 경제적 자유화, 정치적 보수화의 노선을 지속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직후 1980년대초 중국공산당은 당에 집중된 권력을 행정부로 이양

3) 蒙慧; 田源 (2020). “疫情防控中维护党中央权威和集中统一领导的制度优势探析.” 中共南京市委党校学报 2020 (10) : 章庆林. 2020. “论中国政治制度在新冠肺炎疫情防控中的优势.” 闽江学院学报. 2020,41(03)

4) 1개중심은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것이고, 2개 중심은 경제발전을 위한 2가지 원칙으로 하나는 개혁개방,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4항기본원칙’이다.

하는 등 권력분산과 당정분리를 추진했다. 또한, 1인 권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덩샤오핑은 당내 개혁세력들과 함께 1인 권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혁을 도입하였고, 공산당에 집중된 권한을 국무원 산하의 행정부에 위임하고 당정분리를 위한 개혁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고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치개혁의 주체였던 개혁그룹들이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공산당 영도 기반 원칙 위에 추진되었던 정치개혁 조치들은 후퇴되었다.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소련의 해체 등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중국은 공산당 영도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당 유일집권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 정당 민주주의 : 집단지도체제와 민주집중제

문화혁명의 시대가 지나가고 덩샤오핑의 개혁파가 집권한 후 채택된 1982년 중국 헌법은 중국 공산당 영도의 다당합작과 정치 협상제도가 장기간 존재하고 발전하여 왔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8개 민주당파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유일한 집권 정당이며 이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의 원칙이 이어짐을 명시한 것이다.

중국의 민주주의는 다당합작제라고 하는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제와 당내 민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당내민주가 당의 생명(党内民主是党的生命)’이라고 강조하였고, 이는 17차 18차 당대회보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⁵⁾ 중국공산당의 조직원칙은 “민주집중제”이다. 당내민주는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조직원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중국공산당은 민주집중제를 견지하는 것이 4항기본원칙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오쩌둥은 1954년 헌법에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의 민주집중제로 포함될 네 가지 원칙으로 ‘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 ‘개인의 집단에 대한 복종’, ‘하부의 상부에 대한 복종’, 당의 중앙 원칙에 대한 복종’을 주장했다. 이러한 마오쩌둥의 주장은 1982년 신헌법채택까지 중국 공산당 민주집중제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5) 王长江, “不要误读党内民主与人民民主的关系,” 인민일보, 2014.08.28. <http://theory.people.com.cn/n/2014/0828/c83861-25555061.html>

중국은 현재도 공산당의 당 규약 제10조 헌법에서 민주집중제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은 강령과 규약에 근거해 민주집중제도로 조직된 통일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기본원칙으로 당원 각 개인은 당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 각 조직과 전 당원은 당의 전국대표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며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임을 명시하고 있다. 반대로 당 고위 조직은 항상 하부조직과 당원, 대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보고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하며 당의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지침을 기점으로 각 대중의 근로 활동을 보고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민주집중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중국의 정책 결정은 민주집중제의 민주적 정책 결정 원리에 따라 교섭, 타협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조직들을 활성화 시켰다. 이것은 각 조직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중국의 정치개혁은 공산당 영도체제의 유지 하에 추진되었고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의 심화로 사회 이익이 다원화되고 보편화 되기 시작하여 중국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정치체제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 중국 공산당은 민주집중제 원칙에 의거하여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민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시도한다. 당내 민주주의는 민주집중제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당의 조직과 체제 그리고 과정에 대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집단지도체제 역시 이런 민주집중제를 실현하고자 한 구체적 노력의 하나였다. 중국의 당내민주와 집단지도체제에 기반한 민주집중제가 어떻게 운용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중국이 말하는 중국식 민주주의의 현재를 평가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새로이 해석되어진 “민주집중제”의 원리는 각 문제영역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넘어서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 결정 문화를 형성하였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 종종 조정, 협의, 실험, 재협의 및 타협의 긴 과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영도소조와 같은 제도적인 조정 장치를 필요로 하였다.⁷⁾ 이러한 정책 결정의 규범은 정치적 분열의 상처를 깊이 안고 있던 중국의 정치계에 정책 결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희생하는 대신 정치적 갈등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상대적으로 조정의 기회를 더 제

6) 김흥규, “중국의 정책결정과 민주집중제,” 『국제정치논총』 제 44권 1호 (2004), p.426-427.

7) 위의글, pp. 429-430.

공하는 기능을 가져다 주었다.

중국이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라고 강조하는 다당협상민주, 당내민주, 집단지도체제, 민주집중제 등의 내용적 변화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의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주요한 분석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시진핑 시대 중국정치의 변화와 특징

1. 신권위주의론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민주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 경제발전, 후 민주화’라는 신권위주의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신권위주의는 비서방 후발국가들에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철권통치로 사회를 강하게 통제하면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권위주의 단계를 거쳐야만 점진적으로 정치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론이다.⁸⁾ 1960년대 새뮤얼 헌팅턴 하버드대 교수가 비서구 국가 혹은 제3세계의 근대화 과정에 대해 제시한 이론이다.

이후 중국 공산당내 이론가들은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 중국은 서구와 다른 고유한 정치 모델, 강력하고 중앙집권화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신권위주의 이론을 발전 강화시킨다. 경제발전의 당연한 결과로 점점 다원화되던 중국의 이익집단들의 등장과 이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공산당 주도의 집단주의에 담아낼 필요가 있었고 이를 신권위주의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신권위주의 이론은 덩샤오핑시대 이후 최근 시진핑의 일인지배 체제가 강화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왕후닝과 함께 중국 신권위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인 샤오궁친 상하이사범대 교수는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을 신권위주의 1.0, 시진핑의 중국을 신권위주의 2.0의 시대로 구분한다. 덩샤오핑이 구축한 중국식 신권위주의 1.0은 공산당의 강권 통치를 기초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공산당의 통치 지위에 도전하지만 않는다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체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원성을 내포한 ‘유

8) Samuel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68), pp. 398-399.

연한 신권위주의'였다고 평가한 반면 경제발전의 심화로 부패와 빈부격차, 이익집단끼리의 경쟁과 충돌이 극심해지자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등장한 시진핑 시대 권위주의가 신권위주의 2.0이 출현한 배경이라는 게 샤오궁친의 해석이다.⁹⁾

시진핑 시대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2049년 중국건국 100년에 즈음한 세계일류강국으로의 부상이라는 중국몽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가 중국국가주석의 연임제한 폐지 등 1인권력의 장기화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되고 있다.

2. 공산당의 통제력과 침투력 강화

중국은 헌법과 당장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으로 공산당 영도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 영도가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우수한 점이고, 최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 들어 공산당 영도원칙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으며, 공산당 영도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사회 전반에 공산당의 지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제도적, 담론적 노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첫째, 시진핑 체제 들어 중국 공산당은 정부에 대한 당의 지도와 당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구조적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 들어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한 영도 소조와 위원회가 확대 설립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 스스로가 핵심 영도 소조와 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경제사회 전반에도 공산당의 지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치적 제도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들어 민간기업들에 공산당 당조의 설립을 강조한 것이나, 기업에 대한 당의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민간경제분야에도 정치적 개입과 지도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⁰⁾

셋째, 시진핑 체제 들어 국회 격인 전인대와 정협 등에 대한 공산당의 지도를 강화하

9) 정주영,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쟁점과 전망," 『중국지식네트워크』 제 13권 13호 (2019), p. 127-160.

10) 高飞. 2021. "党的领导融入公司治理实践探索." 新长征(党建版). 2021,(02)

는 등 국가 각 기관 전반에 공산당의 영도와 영향력을 제도화하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2021년 양회에서 39년 만에 전인대 조직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전인대에서 가능 하던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무원의 임면을 전인대 상임위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최고 권력 구조에서 임면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와 정부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조직법 개정은 당의 전면적인 영도와 전인대의 정치적 건설을 목표로 한 중요한 조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법 개정에 대해 전인대 상무위의 설명은 “18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는 공산당이 인민대표대회 업무에 대한 영도를 매우 중시하면서 당의 영도를 전면강화하면서 인민대표대회 제도와 업무에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강조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전인대 제도 개선과 시진핑법치사상을 관철하기 위해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조직제도와 업무제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¹¹⁾ 이렇듯 시진핑 체제 들어 중국공산당 영도 원칙은 깊이와 범위에서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집단지도체제의 약화와 1인 권력 집중의 강화

시진핑 체제 들어 중국 권력구조변화의 핵심은 집단지도체제의 약화에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1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담론적 개혁이 지속되고 있다. 시진핑 체제 들어 중국공산당의 국회와 정부에 지도와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공산당 영도의 지속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들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 폐지, 시진핑 사상 헌법에 포함, 시진핑의 ‘핵심’ 영도 지위 부여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정치적 담론으로 시진핑 1인 권력 강화의 당위성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외부의 적과 내부결속

중국의 부상과 함께 시진핑 체제 들어 미중간 무역갈등 등 대중국 세력균형의 위협이 부상하면서 중국 내적으로는 결속과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이 ‘공산당 영도’를 강조하면서 경제 등 각분야에서 정치적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11) 中国人大网, “关于《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修正草案)》的说明, 2021.03.15 <http://www.npc.gov.cn/npc/c30834/202103/1b73e5b8f8f24d4d9e76d0b5fc1cf938.shtml>

서구사회의 공세와 침투에 대한 내적 결속, 정치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는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에 대한 헌법 규정의 폐지 등을 통한 권력 집중과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제 정당성 확보와 집권 능력의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국내외로부터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체제 안정과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2019년 시진핑의 공식회의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2019년 1월 21일에 장차관급(省部級)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반 회의에서 시진핑은 “2019년은 국내외로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중대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전 당과 당원, 특히 영도간부들이 위협에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동시에 이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투쟁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 안정 유지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¹²⁾.

아울러 시진핑 정부는 권력집중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국의 꿈’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중국은 단기, 중기, 장기의 3단계 발전 구상의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즉 2021년에는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완성’하여 첫 번째 백년(공산당 창당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2035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두 번째 백년, 2049년(건국 100주년)에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화합하고 아름다운(富強民主文明和諧美麗)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強國)을 건설’ 하겠다는 것이다.¹³⁾

이에 따라 시진핑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사안, 즉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적 성과, 그리고 고양된 국민의 자긍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적 위상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이에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신시대’의 과제로 ‘인민의 더 나은 삶(美好生活), 공동부유(共同富裕), 그리고 강국화(強起來)’의 실현에 있음을 역설했다. 실제로 중국은 빈곤퇴치, 생태환경 개선, 스마트 도시 건설 등 인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12) 習近平, “提高防控能力著防範化解重大風險 保持經濟持續健康發展社會大局穩定,”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2021. 1. 22).

13) 김상순, “2021년(창당100주년)까지 경제·사회·인민민주·과학 등 4 분야 동시발전, 2049년(건국100주년)에는 완벽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실현,”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974&Newsnumb=2017111974 (검색일: 2021. 1. 9).

중국은 또한 서구진영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와 적극적 대응전략을 토대로 내적 결속을 강화하면서, 개발도상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면서 중국의 지속발전과 체제안정을 위한 우호적 대외환경 구축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IV 2030년 중국 정치의 미래 : “권력 집중적 일당체제”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 중국은 일인 우상숭배와 개인 독재의 문제를 인식하였다. 덩샤오핑은 마오시대의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 등의 실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돌리고, “권력의 과잉집중이 집단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1인에 의한 자의적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¹⁴⁾ 그리고 덩샤오핑 시대의 당내 정책 노선 경쟁과 권력분점, 집단지도체제라는 정치적 전통은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 중국공산당 영도의 체제가 지속되는 속에서도 일정하게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집권의 중국 개혁개방 30여년의 시간동안 중국은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였고, 2011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부상하게 된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락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시진핑 집권의 시기를 맞이한 중국은 세계제일의 강대국화의 꿈을 역설하면서, 중대한 역사적 시기 새로운 시대의 창출에 공산당의 역할과 소명,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개혁개방 30여 년 이후 개방화되고 글로벌화 된 정치사회, 정보화의 가속화로 디지털화된 정치사회,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와 세력균형이 가시화되는 대외환경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대내외로부터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도전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지속발전의 필요성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공산당 영도의 권력구조와 중국식 민주주의의를 지속하면서, 국내 정치사회적 안정과 공산당 권력의 정통성을 견지하고자 할 것이다.

14) Susan L. Shirk (2018), “China in Xi’s ‘New Era’ : The Return to Personalistic Rule,” *Journal of Democracy* 29 (2), 22.

1. 당국가체제의 공고화

8개의 민주당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유일집권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새로운 시대 신형정당제도, 중국식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공산당 영도를 지속 강조하고 있다.¹⁵⁾ 중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에서 가장 우수한 경쟁력으로 공산당 영도를 강조하고 있다.¹⁶⁾

중국은 최근 국가 전반에 공산당의 전면적인 지도와 역할을 제도화, 구조화하는 조치들을 통해 공산당 영도의 당국가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직면할 수 있는 정통성의 위기와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고 공산당 유일 집권과 공산당 영도의 권력구조를 지속시키기 위한 제도적 구축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양회에서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확정하면서, 2035년 중국이 세계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방역 성공과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국정성과로 내세우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권력중심으로의 결속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2. 기술발전과 권력 통치의 진화

전국민의 신용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금융,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여 신뢰높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는 장대한 계획, “신용중국(信用中国)”은 시진핑 체제 들어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이다. 이 신용중국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데이터와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중국의 신용사회 건설을 명분으로 한 새로운 통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4년 사회신용시스템의 4개 분야를 구체화하였다. 즉 정부신용체계, 상거래 신용체계, 사회신용체계, 법신용체계 등 4개분야의 신용체계를 구분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이 중국사회에서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신용체계(Social Credit System)’ 보다 ‘사회신뢰체계(Social Trust System)’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강조하면서 서구가 비판하는 정보통

15) 董树彬. 2020. “中国共产党在新型政党制度中领导地位的生成逻辑.” 上海交通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21,29(01)

16) 张亮亮. 2021. “论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的最大优势是中国共产党领导——基于三个分析视角的解读.” 中央民族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21-01-15

제 측면이 아닌 사회 신뢰 제고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¹⁷⁾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거버넌스 발전에 신용이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인식 하에, 개인은 물론 민간기업의 신용도를 계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서비스의 혜택 혹은 징벌을 받게 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20년 사회신용체계 전면도입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들을 구축해 가고 있으며,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IT공룡기업들이 이러한 사회신용체계 구축의 핵심적 기술과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AI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의 발전을 적극 촉진하면서, 한편으로 기술의 발전이 권력과 체제의 안정과 통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전개하고 있다.

3.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지속

중국은 2030년 미래에도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은 사회주의의 이상향인 평등사회 (egalitarian society)로 이행하기까지 중국은 물질 조건을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 성장과 분배의 과정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강한 집권당으로서 인민의 의지를 최적으로 구현하며 서구식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복잡한 절차와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며 자원의 동원에 효율적이며 거시적인 개혁을 재빠르게 추진하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이 불가피하게 가져오는 사회의 안정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¹⁸⁾ 이런 강한 집권당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요체이며 이 질서를 현 공산당은 향후에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중국정치를 전통적인 서구식 정치발전론에서 바라보는 다수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현 공산당 주도 시스템이 합법성과 정당성 면에서 다당제에 의거한 선거에 의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다원주의적 정치변화를 겪고 이내 자유주의적 질서로 이행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미래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과 많은 중국인

17) Song Bing, "The West May Be Wrong About China's Social Credit System," <http://onlinelibrary.wiley.com.ssl.access.yonsei.ac.kr:8080/doi/pdf/10.1111/npqu.12191>

18)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s," Xinhua.net.

들은 실제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효율성 면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서구의 어느정당보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만약 중국이 서구의 다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할 경우 중국은 사분오열되어 극심한 혼란과 무정부로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적 배경 하에서 실제 중국 정치가 근미래 서구식 민주주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국정치의 미래 즉 약 2030년경의 중국 정치의 미래는 결국 중국정치에서 서구식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일인지배체제가 공고화 되고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2049년 세계일류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은 내적으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2022년 20차 당대회가 현재의 중국 정치 특징, 1인권력집중과 공산당 영도체제의 심화가 지속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주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미중경쟁의 심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사이에서 중국은 서구사회가 권력집중과 권위주의의 강화라고 비판하는 다양한 정치적 추세들을 역사적 선택과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공산당 영도의 확대강화와 권력집중의 당위성을 역설할 가능성이 높다.

V 결론

2020년 중국공산당 19차 5중전회에서 통과된 ‘5개년계획과 2035년 중장기 목표 건설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에도 중국 공산당의 지속된 노력으로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을 타파해야 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¹⁹⁾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중국몽 실현의 주요한 주체로 공산당의 위상과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대외환경의 악화와 대내적 결속 속에서 공산당의 권력정당성과 권력집중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2030년 까지도 중국공산당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지속하고 공고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공산당 영도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앞세우고 여기에 더해

19) 李海青. 2021. “使命型政党领导能力与2035年远景目标的实现.” 人民论坛·学术前沿. 2021,(01)

거버넌스 현대화의 주요한 축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유지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연임규정이 폐지된 시진핑 체제를 지속시키려는 내적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의 정치가 마오쩌둥 시대의 이상숭배와 제도화되지 않은 1인권력집중으로 후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개정,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에 기반한 권력집중이 전개되고 있으며, 형식적 집단지도의 원칙 내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²⁰⁾ 다만, 최근 중국의 대외적 환경이 중국정치체제의 권력집중과 통제강화의 추세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패권경쟁과 서구진영의 대중국 공세가 확대될 경우 중국은 내부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기댄 정치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듯 2030년 중국정치의 미래는 중국의 경제성장, 대외환경, 당내권력경쟁 등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20) 조영남, 시진핑 일인체제가 등장하고 있는가? 『국제·지역연구』 제 24권 3호 (2015 가을), p. 147.

제3장

중국 경제의 미래, 2030

제3장 중국경제의 미래, 2030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I 서론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동북아 지역은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도 미국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로 등장하였다. 중국의 GDP는 1978~2017년 기간 동안 3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중국의 GDP 규모는 2007년 독일, 2010년 일본을 추월하면서 G2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2009년 중국 GDP의 비율이 미국 GDP 대비 35%에 달하면서 미국 사회 내 중국위협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중국 GDP가 미국 GDP의 69%를 돌파한 시점에서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은 시작되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미국은 먼저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 지식재산권 침해, 국영기업 보조금, 기술이전 강요 등 통상 분야를 먼저 지적하고 나섰다. 이후에는 화웨이, ZTE, 틱톡 등 중국 첨단기술 기업을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기술 경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도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의 전방위적 생산에 영향을 주면서 산업 분야의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은 최근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통해 향후 중국경제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혁신, 내수확대를 위한 쌍순환 전략 등을 통해 2035년까지 선진국에 도달하는 전략을 기치로 내걸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2월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 2020년 중국은 이미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달성했으며, 2035년까지는 1인당 소득을 두 배 증가시켜 중진국 수준에 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향후 10~15년간을 경제 대국 달성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잡은 것이다.

향후 2030년 중국이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 국가가 되었을 경우, 세계경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중국의 부상으로 기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왔던 비대칭적 경쟁 구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한국 경제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매우 적실하고 필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향후 2030년 중국 경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거시경제를 전망하고, 세부적인 산업 구조변화 분석을 통해 향후 산업경제 변화를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중국의 대외경제 위상과 변화에 대해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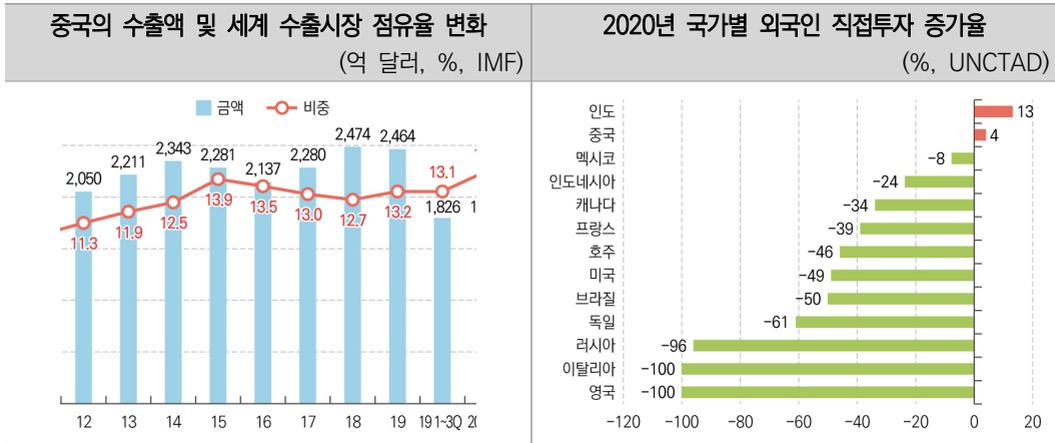
II 2030 중국경제 전망

1. 2030 중국 거시경제 전망

중국은 지난 3월에 열린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 강요」(이하 <강요>) 초안을 발표하면서 '14.5 계획(2021~2025년) 및 2035년까지의 중장기 전략(十四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草案)' 초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13.5계획 기간에 제시한 연평균 6.5% 성장과 같이 구체적인 GDP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 말 열린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5중전회)에서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 규모 및 1인당 GDP를 2배로 키우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중국의 GDP는 24조 9300 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하며 3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영향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교역이 큰 폭으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중국은 2020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외국인 직접투자 등이 증가세를 보이며 글로벌 교역경

제에서 중국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그림 1] 중국 수출액 변화와 국가별 직접투자 증가율

자료: 전경련(2021), <코로나19 이후 세계 교역·투자 변화와 대응>

가장 먼저,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인건비 등의 생산비용의 상승과, 미·중 갈등까지 지속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했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8년 12.7%까지 감소하였으나 2020년(1~3분기)에는 14.5%까지 반등하였다. 코로나19 조기 방역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다시 중국으로 조달선과 제품 주문을 되돌린 결과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중국 경제시스템의 최대 리스크로 대두되던 기업부채도 이제는 중국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닌게 되었다. 2019년까지 중국경제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대두되던 요인들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소되고 있으며, 코로나19는 중국에게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다.

일찍이 글로벌 싱크탱크에서는 2030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등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코로나19의 충격에 휩싸인 미국 경제는 역성장했으나 중국 경제만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더욱 빨리 미국과의 경제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문가들이 관측하는 중국의 미국 GDP 추월 예상 시점도 기존의 2030년에서 점차 더 앞당겨지는 추세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호미 카라스 연구원은 2028년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과거 예측치 보다 2년 더 빨라진 것이다. 영국 기반의 싱크탱크인 CEBR (Center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도 중국 GDP가 2028년에 처음으로 미국 GDP를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²¹⁾ 홍콩상하이 은행의 예측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도 2028년 중국의 명목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9년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이르면 2036년 중국이 미국 경제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번 추계에서 8년이 앞당겨졌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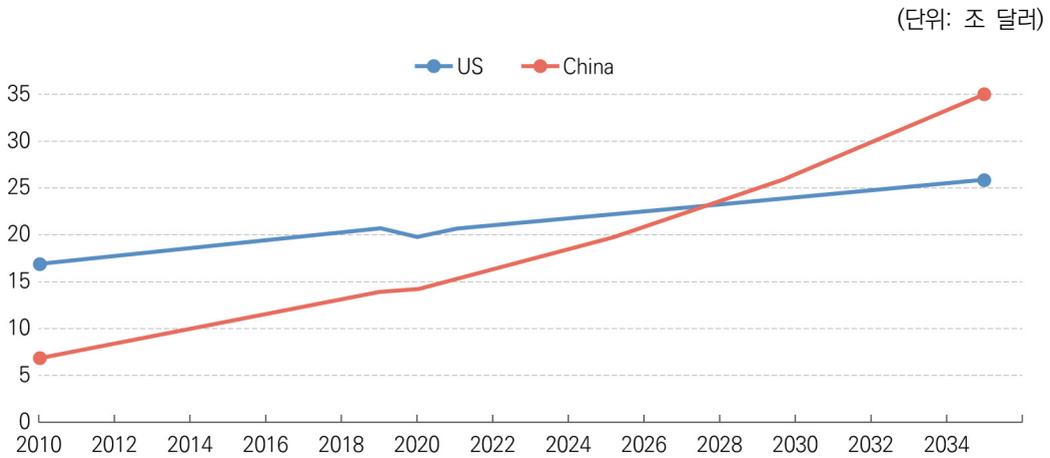
IMF는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2026년까지 GDP 성장분의 약 20.4%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당시 중국 GDP는 미국의 31%밖에 되지 않았으나, 최근 IMF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2020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71% 이상이 돼 처음으로 70% 선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9년보다 4.2%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이다.²³⁾ 前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며 현재 베이징대학 교수인 린이푸는 중국이 2030년까지 연간 8%의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세계경제 성장의 30%를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²⁴⁾

21) CEBR(2020.12.29.) <World Economic League Table 2021>

22) 财联社(2020.12.11.), “日本研究机构：中国经济有望在2028年或2029年超过美国”, <http://stock.stockstar.com/SS2020121100000912.shtml> (검색일자 2021.4.18.)

23) bloomberg(2021.4.6.), “China’s Growth Set to Drive World Economy in Post-Pandemic Year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4-06/china-s-growth-set-to-drive-world-economy-in-post-pandemic-years>

24) 中国新闻网(2020.10.28.), “林毅夫：2030年前，中国GDP仍有每年8%的增长潜力”, <http://www.chinanews.com/gn/2020/10-28/9324817.shtml> (검색일자 2021.4.15.)



[그림 2] 미국과 중국의 2019-2035년 GDP 변화 전망

자료: CEBR(2020), 〈World Economic League Tabl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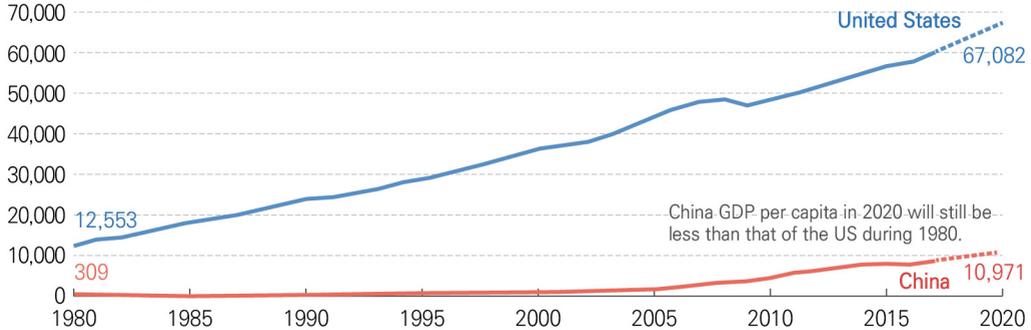
이러한 관측대로라면 2030년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GDP 총량 기준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다른 국가들이 경제 회복을 시작한다고 해도 상황이 일거에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다른 경제대국 대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간다면 총량기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중국의 1인당 GDP는 단기간에 미국의 1인당 GDP 수준에 이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인당 GDP는 약 6만3051달러로 중국(1만 582달러) 대비 약 6배를 기록했다. 중국은 14.5 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겠다는 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나,²⁵⁾ 중진국 수준의 의미는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달러 이하 국가를 의미하며, 이는 2019년 대비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중국이 향후 국민소득까지 안정적으로 제고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이다.

25) 21世纪经济报道(2021.1.12.), “应如何实现2035年人均GDP达到中等发达国家水平的目标?”, <http://www.21jingji.com/2021/1-12/0MMDEzNzlfMTYxOTM0MQ.html> (검색일자 2021.4.14.)

CHINA VS UNITED STATES: GDP PER CAPITA COMPARISON

GDP per capita, current prices
(US dollars per capita)



[그림 3] 중국과 미국 일인당 GDP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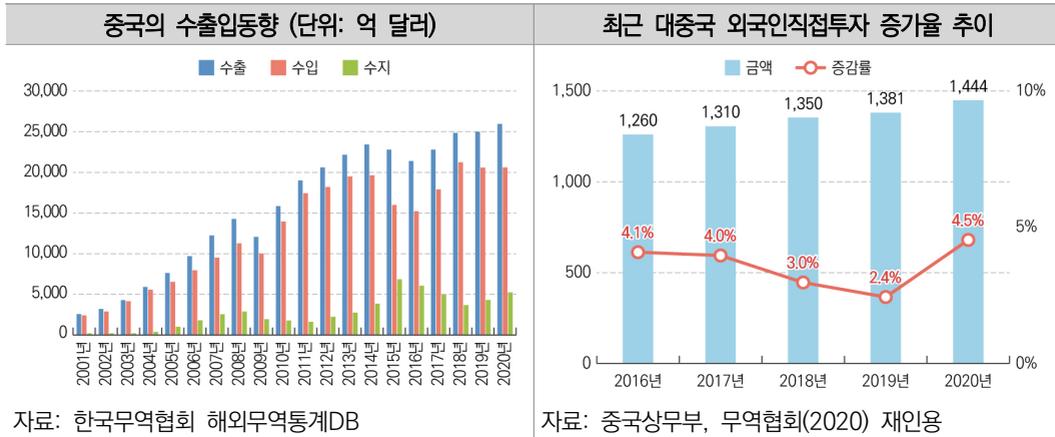
출처: IMF; MGM Research

또한, 중국이 총량기준의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성장까지 견고히 이루면서 2030년에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지는 불확실한 변수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달려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대전환 앞에서 중국경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되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지, 소비중심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등 중국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과 불확실한 요소들의 해결 여부에 따라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 여부가 달려있다.

II 중국 대외경제 전망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3.6%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5,35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미중 통상분쟁의 타격이 예상되었으나, 2020년 중국의 대미 흑자는 전년대비 증가한 3,169억불을 기록하였다. 2020년 중국의 교역실적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하면서 주요국 중 유일하게 상품 무역의 플러스 성장을 이룩하였다. 중국의 對외국인직접투자(FDI)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5%증가하였으며, 1,444억불로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영국 등의 유럽국가와 ASEAN의 대중국 투자는 오

히려 증가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DB

자료: 중국상무부, 무역협회(2020) 재인용

[그림 4] 중국의 수출입 동향 및 FDI 증가율 추이

출처: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중국상무부; 무역협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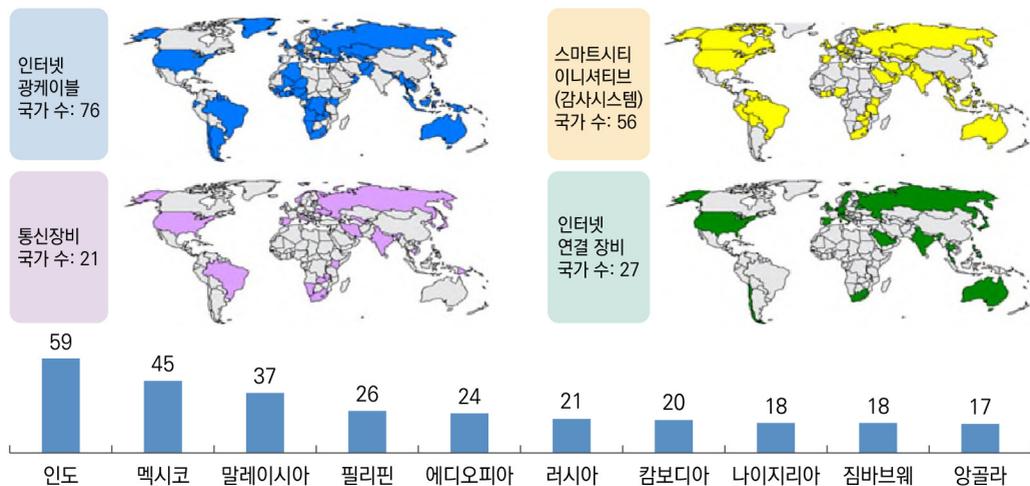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입, 투자 실적이 양호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세계 1위 무역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중 간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등에 맞서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중국 대외경제의 미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장에서는 중국의 주요 대외경제 전략인 일대일로, 자유무역시범구, FTA 등 글로벌경제 거버넌스 전략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1) 일대일로 전략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의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전략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15년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비전과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을 발표하면서 공식화 되었다. 일대일로는 약 60여개 연선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과 연선국과의 교역과 투자는매년 증가세로 유지되면서 중국의 경제영토는 확장되고 있다. 2019년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에 대한 수출입 총액은 9,26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에 대한 비금융 직접 투자는 150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7년부터 글로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면서 일대일로에 디지털 요소를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2017년 제1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회의에서 제기된 후 공식화 되었으며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축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5G, 양자컴퓨팅, 인공지능등의 디지털 분야에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데이터,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21세기의 디지털 실크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디지털 실크로드는 중국 ‘일대일로(Belt Road Initiative·BRI)’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으며, 항만, 도로, 철도 등의 물리적인 인프라 중심이었던 기존 일대일로 구축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건설되고 있다.

화웨이는 아프리카의 4G 네트워크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5G 기술 개발 및 표준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화웨이의 자회사인 화웨이마린은 전세계 약 90건의 해저케이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ICT 업체들은 AI 기반 감시시스템을 제3세계 국가에 집중 수출하고 있으며, 화웨이, ZTE, 하이커비전 등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가 중이며, 총 36개국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공급하고 있다.²⁶⁾



[그림 5] 중국 디지털 인프라 구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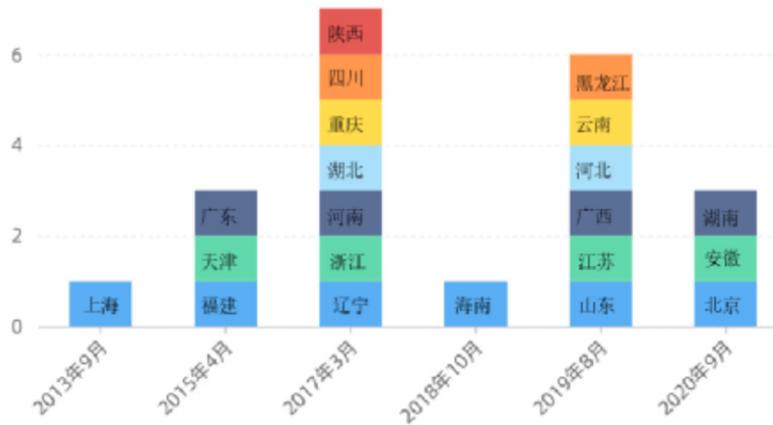
출처: Bloomberg (2019) 및 IITP (2020)에서 재인용

26) 조은교(2021),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SR) 전략과 시사점>, 산업경제 2월호, 산업연구원

중국은 올해 3월 개최된 양회를 통해서도 다시한번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강조하였다. 그린·보건·디지털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의 발전을 강조하였으며,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에서는 경제무역 및 투자의 실무협력을 강화와 상호 인프라 연계 추진 등을 강조하였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연선국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일대일로 협력 수준을 더욱더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은 백신, 방호복,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산업과 협력 분야에도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기존의 물리적인 인프라에 머물러 있던 일대일로에서 벗어나, 그린·보건·디지털 분야에서 더욱더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 자유무역시험구(FTZ)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전략은 개혁개방의 주요 조치 중 하나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와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되고, 서비스 부문의 육성과 개방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추진된 전략이다. 자유무역시험구 내에는 자유로운 유통, 무역, 금융, 물류서비스가 이뤄지며,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되는 경제특구다. 20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정식으로 출범되면서 시작된 동 전략은 2015년, 광둥, 텐진, 푸젠으로 확대되었고, 2017년에는 랴오닝, 산시, 저장, 쓰촨, 충칭, 허난, 하이난, 후베이성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베이징(北京)을 포함 후난(湖南)성, 안후이(安徽)성에 추가 설치하면서 중국내 자유무역시험구는 총 21곳으로 늘어났다.



[그림 6]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설치 현황

자료: 经济观察网(2020)²⁷⁾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하이난 자유무역항(시험구)은 홍콩문제가 대두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2018년, 중국은 하이난(海南)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0년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난은 자유무역항이 되면 홍콩처럼 중국 본토와 확연히 다른 경제 체계로 운영되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허브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리적 이점 및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한다면 향후 하이난성은 홍콩처럼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이난성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금융, 관광산업, 첨단기술산업 등에서 많은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홍콩 이상의 대외개방 거점이 될 전망이다.

(3)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중국은 2001년 WTO가입을 기점으로 국제통상질서에 편입되면서, FTA 추진을 준비하였으며 2013년 FTA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3월 기준 중국은 18건의 FTA 체결하였으며, 10건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27) 经济观察网(2020.9. 25), 图解中国21个自贸区: 原18个自贸区做到了什么? 3个新晋自贸区有什么特点?, <http://www.eeo.com.cn/2020/0925/416500.shtml> (검색일자 2021.4.20.)

중국은 FTA, RCEP 등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중 갈등 격화 이후,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 연대강화 등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대응하여 중국 주변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은 RCEP 회원국 중 비준을 가장 빠르게 완료하였으며, 동시에 국제통상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30년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들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올해 '14차5개년(2021-2025년)' 계획을 통해 국제규범, 체계, 표준 등의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를 주요 대외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고, WTO 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세계 금융 시스템 개혁 촉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CPTPP가입 고려, 한중일 FTA의 조기체결 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근에는 206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녹색전환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하고 있다.

자유무역, 규범, 녹색전환 등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에서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 주의의 파고를 넘어서 중국이 2030년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주도할 수 있을지는 향후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발효 및 서명) RCEP, 캄보디아, 모리셔스, 몰디브, 조디아, 호주, 한국, 스위스,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페루,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파키스탄, 아세안, 홍콩, 마카오	(협상중) GCC, 노르웨이, 한중일, 스리랑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몰도바, 파나마 (개선협상)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피지, 네팔, 캐나다, 방글라데시, 몽골, 파푸아뉴기니, 스위스

[그림 7] 중국의 FTA 체결 현황

자료: FTA 강국코리아(<https://www.fta.go.kr>)

Ⅲ 중국 경제의 과제들

중국 경제가 세계의 그 어느 경제보다 코로나 19의 위기에서 빨리 회복되고 성장의 궤도로 복귀하고 있음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2030년 경 경제 사정이 일관되게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코로나 19 위기 이전부터 대내외적으로 많은 경제적 난제를 지녀왔고 이 문제들은 코로나 종식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중국 경제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난제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중국의 성장 동력 저하와 인구 고령화 그리고 소득 격차 심화 문제이다.

1. 중국 성장 동력의 한계

중국의 지난 40년간의 초고도 경제성장은 요소투입 특히 양질의 값싼 대규모 노동력에 의지한 제조업의 부흥과 부동산업의 활황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런 가격경쟁력에 의거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의 제조업이 중국 초고속 성장을 이끌었고 이 고속성장이 이끈 도시화와 부동산 활황으로 이어져 건설과 소비를 끌어올려 다시금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 및 제조업 중심의 고속성장을 지속 해온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이를 일찌감치 인지하고 2015년 ‘중국제조 2015’를 입안 2025년까지 중국을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로 주요 육성산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차세대 정보기술, 디지털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 및 우주장비, 해양엔지니어링, 선진철도설비,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 기계, 신소재, 바이오의료기기등이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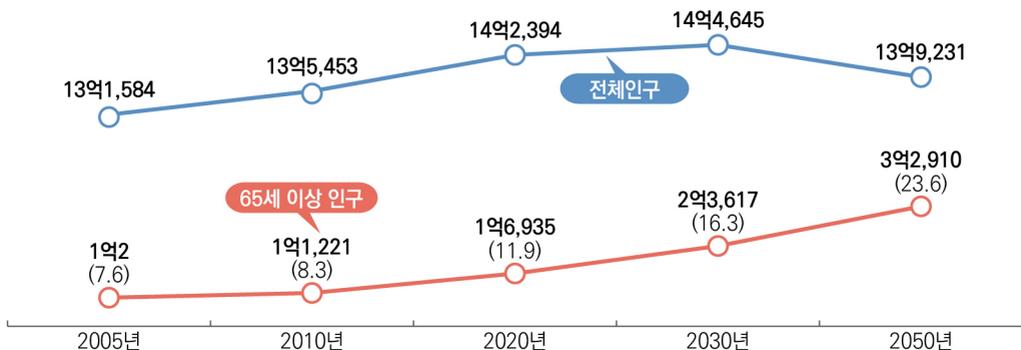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전환이 중국경제의 공급측 개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노동집약적 경제에서 혁신과 기술발전에 의거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내적으로 (endogenous)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단순히 정부의 계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 주도의 기술연구 및 신산업 발굴 그리고 교육 및 인력정책의 주도권이 민간주도로 전환되어야 하며 상당부분 시장화 되어야 한다. 중국정부도 이를 인지 ‘대중창업’ 및 ‘민중창신’의 구호를 앞세워 시장에서의 혁신을 정부주도의 신산업 발굴과 연계시키려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한다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차세대 경제성장의 핵심이될 인공지능 (AI)과 사물인터넷산업의 경우 중국정부가 성장률을 설정해 놓고 형성될 시장규모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투자기금과 인프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육성책이 신성장 동력의 잠재력을 어느정도 실현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2. 인구 고령화

중국의 인구문제가 중국 경제 미래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일견 역설적이다.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자 양질의 거대한 노동력에 기반한 제조업과 이들이 형성한 거대한 내수시장이 중국의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음에도 이것이 오히려 중국 경제 미래에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중국경제의 미래에서 인구문제는 인구 고령화 문제를 일컫는다. 한 자녀 갖기가 준 제도화 된 상태에서 기존의 노동가능 인구가 가파르게 고령화 되고 있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전망치도 나오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30년에, 유엔은 2032년부터 인구 감소를 예상했다. 예상했던 것 보다 너무 빠른 감소추세이다.



※ ()안은 비율, 2010년 이후는 추정치

[그림 8] 중국 인구 고령화 추세

출처: 유엔 인구국

중국의 인구성장세가 감소추세로 돌아선다고 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제조업이 당장 멈추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감소세로 이어진다는 것은 주류경제학의 상식 중의 상식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저렴한 대규모 노동력에 의지한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경제에서 인구감소는 저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소비감소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경제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이유이다,

문제는 중국도 한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를 돌이킬 마땅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만큼 인구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이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경제성장을 슬로건으로 강압적인 한 자녀 정책을 밀어부쳤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로 인한 빠른 생활방식 변화가 이 정책을 고착화 시켰다. 2016년 뒤늦게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인구 고령화 추세를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 2,100만의 베이징에서 지난해 출생자는 10만368명으로 전년(13만2,634명)에 비해 24.3%나 급감했다.²⁸⁾

출생률 저하만큼 인구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어 경제의 활력을 앓아가고 있다. 노동인구 대비 고령인구를 말하는 고령인구부담비율(OADR)의 경우 중국은 2050년에 1을 기록해, 미국 영국 독일보다 부담이 커지게 된다.²⁹⁾ 이 경우 당연히 국가는 고령자 대책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하고 그만큼 경제도 활력을 잃어간다. 서구 선진국이 밟아온 전형적인 고령 경제 (aging economy)로 중국도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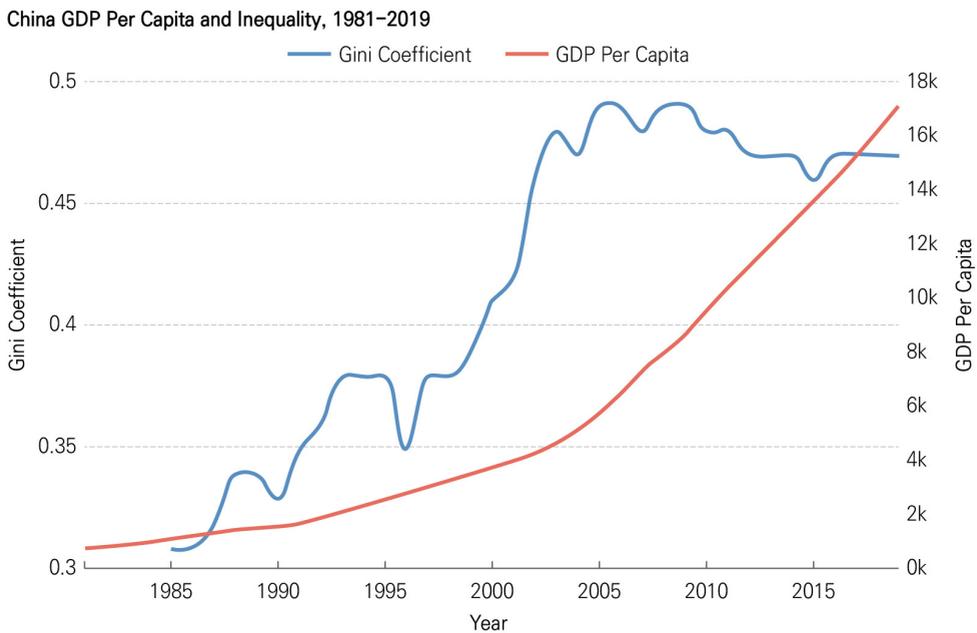
3. 소득 격차 심화

중국 경제가 미래 마주하게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악화되는 빈부 격차이다. 소득격차 심화 혹은 양극화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먼저 중산층의 등장을 방해해 탄탄한 소비와 내수에 기반한 중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28) 안승섭, "빈민층 쫓아낸 中 베이징시 인구 17년 만에 첫 감소," 연합뉴스 2018.0.1.22.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2082900074> (검색일: 2021.06.27.).

29) 이태규, "중국의 인구 역전...세계경제 복병 우려," 한국일보 2021.05.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012570000238> (검색일: 2021.06.29.).

중국과 같이 압축 고도성장을 하는 국가들이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면 “도시화를 가속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 소비는 계층적으로 소비잠재력이 큰 대규모의 중산층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소득이 극도로 양극화 되면 일부 초 상류층과 막대한 저소득 계층의 소비 양극화로 인해 아정적 소비증가가 이루어 지기 어렵다. 아래 그림은 지난 40년간 중국이 보여온 일인당 국민소득의 변화와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니 지수의 변화를 함께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림 9] 중국 일인당 국민소득 및 지니계수 변화 추이

출처: Milanovic (2021)³⁰⁾

위의 그림이 보여주듯이 중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만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소득 격차를 말해주는 지니계수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소득 격차가 매우 았 좋다고 평가되는 0.4 구간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돌파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30) Branko Milanovic, A New Oligarchy Can Be Restrained Only by the Government That Made It Foreign Affairs (Feb. 2021), pp. 1-10.

이런 소득 격차의 확대는 중국 내부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이 내수측면에서 심각한 저성장 국면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득구조를 개선해 견실한 중산층을 만들어 내지 않는 한 내수에 기반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경고이다.

하지만 중국의 소득 격차 문제는 구조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실제로 버는 임금소득에 비해 살인적으로 치솟는 집값과 교육 비용이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웬만한 임금 상승으로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견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오면서 중국 정부 스스로가 빈부격차를 용인한 측면이 적지 않다. 중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주택 보유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부의 대물림의 견제 장치가 없다는 의미다. 게다가 소득불평등이 도-농 간 격차, 연해 지방과 내륙지방과의 격차에 의해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단시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³¹⁾

두 번째로 소득 격차의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 기반을 잠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라는 공산당의 통치 이데올로기 공백을 민족주의와 경제성장의 과실로 메꾸어 왔다는 점은 잘 알려진 바이다. 하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화 되면서 대다수 중국 인민들의 물질적 기반이 침해되고 이는 곧 중국 인민들의 공산당 지지 철회로 이어질 수 있는 휘발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저임금에 불만이 쌓인 노동자, 농민 등 소외계층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소요와 불안정은 갈수록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농민공 문제의 지속과 군체성 사건의 증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민감한 반응은 이를 방증한다.³²⁾

중국 공산당 역시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 이미 2020년 중국 공산당은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양극화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과감한 증세와 강력한 재분배 정책도 예고했다. “중국 공산당이 경제의 ‘수요 측면’을 고치겠다고 선언한 것은 민간소비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예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최근 ‘수요부문의 개혁’을 새롭게 제시했다.³³⁾

31) 최원석,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소득 불평등: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1호 (2015), p. 189.

32) 손인주, “두려움의 정치: 시진핑 권력강화의 심리적 동인,”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제1호 (2020), p. 139-141.

33) 홍승희, “중공산당 양극화 해소 선언...증세·재분배정책 펼쳐나,” 헤럴드 경제 2020.12.24. <http://biz.heraldcorp.com>

IV 소결

중국 경제는 2030년경 비록 성장의 속도는 줄어들겠지만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에 휩싸인 미국 경제는 역성장했으나 중국경제만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더욱 빨리 미국과의 경제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하이난성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과 그린·보건·디지털 실크로드 이니셔티브가 경제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이런 경제발전의 성과와 비례하여 자유무역, 규범, 녹색전환 등 글로벌경제 주요 이슈에서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심각해진 소득 양극화는 이런 중국이 극복해야할 경제적 과제로 남을 것이다.

제4장

중국 대외관계의 미래, 2030

제4장 중국 대외관계의 미래, 2030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I 서론

중국의 미래는 앞서 논의된 대내적 요소 즉 정치와 경제의 변화 외에도 중국이 맺고 있는 수많은 국가와의 대외 외교·안보 관계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와의 관계는 중국을 둘러싼 안보환경 (security landscape)의 변화를 통해 중국의 미래를 큰 틀에서 규정할 것이며 양자 관계 (dyadic relation)의 변화-즉 갈등과 협력수준의 변화-를 통해 중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장에서 초점을 두는 부분은 중국의 대외관계 특히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이다. 안보환경이라는 구조적 조건은 중국도 어느 정도 외생변수 (exogenous variable)로 여겨야 할 정도로 중국 외의 다양한 힘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하지만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는 중국 스스로가 자신의 국익을 정의 및 재정의하고 해당국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를 통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이에 대한 해당국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중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장에서는 특히 중국이 중시하는 주요 양자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과 이들 국가와의 미래 관계를 예측해 보고 이것이 다시 중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해 보려고 한다. 특히 중국이 역사적 부상과 동시에 그 양자 관계에서 중요성을 두고 있는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예측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이 이들과 앞으로 맺을 양자 관계가 다가올 중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식별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 대외관계의 미래

1. 중·미관계의 미래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강대국화 일정을 2035년으로 설정하고 비교적 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강대국화 실현의 목표는 이른바 ‘사회주의 현대국가’ 건설이라는 내부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사회를 향해 강대국 중국의 지위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이 최근 들어 가장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중국이 강대국에서 패권국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면서 다차원적인 대중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불거지고 있는 갈등이 무역 및 기술 그리고 군사적 갈등이다.

(1) 중·미 무역 전쟁

미중 무역 분쟁은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WTO에 제소하며,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은 2019년 7월 30일까지 1여 년 동안 2회의 정상회담, 12차의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고 2020년 그 막을 내린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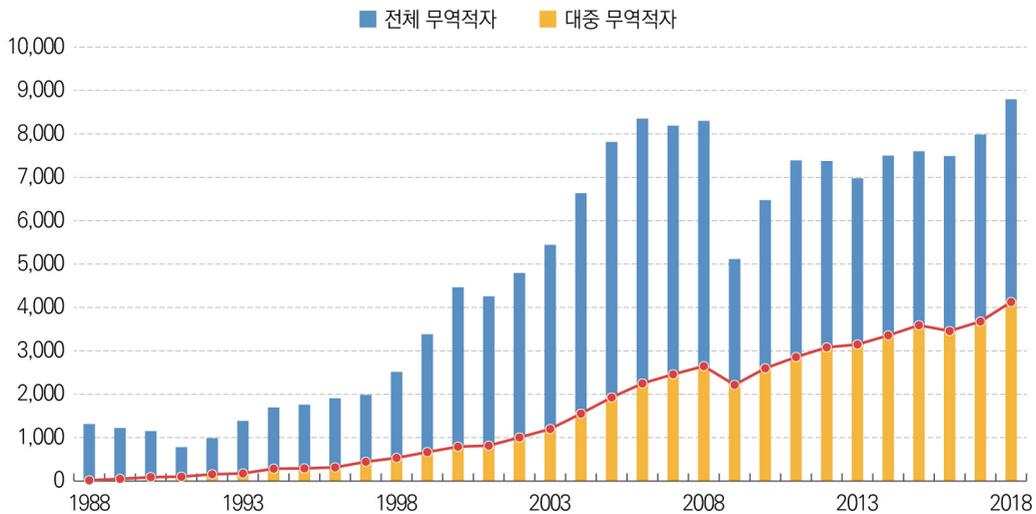
양국의 무역전쟁은 그동안 보복 관세의 부과, 무역협상, 관세부과 연기, 재협상, 협상 타결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Huawei)와 관련 기업에 거래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기술 경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³⁵⁾ 그리고 2019년 8월 5일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용인함으로써 1달러=7위안이 붕괴하였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환율 문제로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

34) 김치연, “[일지] 미중 무역전쟁 주요 진행상황,”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08125/> (검색일: 2020. 1. 9).

35) 황수연, “기업도 화웨이 쓰지마라” 끝내 中 화약고 때린 트럼프,” <https://news.joins.com/article/23468944> (검색일: 2020. 1. 9).

중·미 역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커지는 대중국 무역 흑자이다. 트럼프도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이 중국과 경제교역 규모를 늘려나갈수록 미국이 손해를 더 보는 현상이 지속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각종 불공정 무역 관행과 중국 내부의 각종 보조금과 산업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래 그림은 2018년 기준 미국 전체 무역적자에서 대중국 무역적자라 차지하는 비중을 시각화한 것이다.

(단위: 억 달러)



[그림 10]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추이

출처: KDI 경제정보센터

문제는 미국이 시작한 중·미 무역 전쟁이 단순한 무역관계의 불균형 그 이상이라는 점이다. 미국 주도의 무역 전쟁은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끈질기게 추진해온 중국 길들이기 (taming Dragon) 전략의 확장판이다. 오바마 당선 이전 부시 행정부는 중국의 대(對)테러전쟁의 협조를 얻어내고 대중국 전략을 상당히 축소 시켰다. 하지만 이시기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력 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렇게 급 부상하는 중국에 본격적인 관심을 두기 시작한 시점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이다. 당시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은 소위 말하는 아시아 축 (Pivot to Asia) 이후에 개명된 아시아에서 재균형 (Rebalancing in Asia)정책을 대 전략

(grand strategy)로 추진하면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입 (engagement)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공세적 외교 정책을 부정한 오바마 행정부는 부드러운 수사로 이 정책을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칭했으나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군 해병대의 동아시아 순환배치, 필리핀과 미군기지사용협정 재개, 미얀마와 수교, 한미일 동맹의 강화로 중국 둘러싸기 (encircling China)라는 전략적 목표를 확실히 했다.³⁶⁾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대중국 압박정책을 무역 전쟁으로 이어받은 형국이다. 오바마의 대중국 견제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이라는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대중국 견제를 집요하게 실행한 것이다. 대 중국 무역수지 불균형, 미국 일자리 감소, 중국의 미국기술 도용, 중국의 차별적인 미국기업 대우 나아가서 중국의 최첨단 기술에서의 미국기술 유출 및 복제등 수많은 경제적 언사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을 장식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이 부상하는 강대국의 GDP 성장과 국력 성장에 주는 영향에서 볼 때 분명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의 대응도 시시각각 변해갔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 초기에는 미국의 공세를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미국과의 양자적 차원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미중 양국이 마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막다른 무역 분쟁을 전개하는 듯 하면서 동시에 2017년 '100일 계획', 2018년 '90일 무역협상' 그리고 다시 2019년 G20 정상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패턴을 반복하였다.

하지만 2019년 5월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였음에도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진핑 정부의 타협적인 대미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이 사이버 안전법의 수정, 외국자본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문제 등을 제기한 것을 통상정책의 범위를 넘어 국내 정책과 중국 경제 체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강경 모드로 돌아선다. 미국을 “중국이 한 가지를 양보하면 미국은 다른 한 가지를 더 양보하라는 식으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은 미국이 상호존중,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의 주권과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36) Kurt M. Campbell, *The Pivot: The Future of American Statecraft in Asia* (Twelve, New York: 2016), pp. 15-172.

중국은 더 이상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요컨대 중국은 미국의 공세가 중국의 체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자 이를 선을 넘는 것으로 판단, 기존의 타협적 기조에 변화를 주고 미국과의 분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루한 밀고 당기기의 협상이 1차 무역협상 타결 때까지 이어졌고 이 시기 중국과 미국은 최악의 말의 전쟁 (war of words)을 벌이며 상호 불신을 키워나갔다.

중국은 미국과의 18개월간에 걸친 무역전쟁의 1단계를 2020년 1월 16일 끝낸다. 중국과 미국이 1단계 무역역합의에 서명한 것이다. 합의의 핵심 내용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약속하며 금융시장 개방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2020년 1월 예정되었던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철회하고, 그동안 36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해온 기존 관세를 최대 50% 인하한다는 것이다.³⁷⁾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간의 풀리지 않은 현안은 산적해 있는 상태다. 미국은 중국 국영기업의 보조금 문제를 여전히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첨단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차 무역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의 대미 인식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점이다. 중국은 무역전쟁 초기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일방적이라며 반대해 왔으며 협상 단계에서는 보복을 불사하는 초강경 기조로 돌아선다. 이는 무역전쟁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시기 발생한 중국의 대미 불신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을 의미한다.

(2) 미·중 기술 경쟁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하의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은 최근 무역 전쟁을 넘어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말기에 보여준 미국의 화웨이 (Huawei) 제재는 미국이라는 현 초강대국이 부상하는 패권국의 한 기업을 향해 무역 전쟁에 버금가

37) 이상배 “미중 무역협상 전격 타결, 트럼프 서명”...무역전쟁 일단락, 머니투데이 2019.12.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1307333446544> (검색일: 2021.01.19.).

는 압박과 제재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화웨이와의 전면전 포성이 가라앉기 전에 이번에는 트럼프를 뒤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반도체 갈등을 벌이고 있다. 말 그대로 과학기술 분야에서조차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9년 5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힌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하는 기업리스트 (Entity List)에 올랐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미국 내 기업활동이 금지되고 만다.³⁸⁾ 2020년 이 금지는 1년 연장된다. 삼성, 대만 TSMC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Limited) 등 세계 모든 반도체업체가 미국 기술을 쓰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화웨이 납품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된 이유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제재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안보'상의 이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웨이가 민간기업의 외피를 두른 사실상의 중국 정보기관 성격이 짙다고 판단한 것이다.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심은 '백도어' (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통해 전 세계 기밀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화웨이 장비에서 은밀한 백도어를 발견했으며 이는 서구 국가를 염탐하는 장비"라고 주장했다.³⁹⁾

이러한 미국의 의심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 2011년 미국 국방부는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한 해 뒤 하원 정보위원회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 전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비구입 금지를 권고했다. 미 의회는 2018년 8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⁴⁰⁾

38) 이다비, "화웨이, 美 '거래금지'에 발끈...“소송도 불사,” 조선일보 2019.05.1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6/2019051602150.html (검색일: 2021.05.05.).

39) Bojan Pancevski, "U.S. Officials Say Huawei Can Covertly Access Telecom Networks," *Wall Street Journal* Feb., 12 2020 <https://www.wsj.com/articles/u-s-officials-say-huawei-can-covertly-access-telecom-networks-11581452256> (검색일: 2021.05.17.).

40) Emily Birnbaum, "House passes legislation banning government from buying Huawei equipment," *The Hill* Dec., 16, 2019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474790-house-passes-legislation-banning-government-from-buying-huawei-equipment> (검색일: 2021.05.18.).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정보기술(IT) 발전을 화웨이라는 거대기업을 통해 주도해 왔다. 2012년 이동통신장비 부문에서 스웨덴 에릭슨을 누르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이후 독보적 1위를 고수하며 2019년 기준 28%의 점유율을 차지한바 있다. 특히 화웨이는 중국의 기술 굴기의 대표주자였다. 2019년 매출의 41%를 해외 시장에서 거뒀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21세기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최전선에 있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서남아시아부터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맺을 때마다 화웨이 통신망을 깔고 스마트폰을 쓴다.⁴¹⁾ 미국이 이런 최대 통신장비업체의 숨통을 끊은 셈이다.

미·중간의 화웨이를 둘러싼 경쟁은 최근 반도체 전쟁 (a chip war)로 확산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칩 공급제한과 반도체 생산설비인 파운드리 시설의 미국 내 생산 독려가 자리하고 있다. 파운드리란 반도체 산업에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전문 생산업체를 지칭한다.⁴²⁾ 그동안 전통적으로 미국은 인텔이 주도하여 설계를 그리고 이 설계를 받아 생산 공급하는 일은 주로 대만 TSMC가 담당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고 TSMC는 미국의 압력에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거부할 의사를 밝혔다. TSMC는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서부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의 최대 반도체 생산 업체인 SMIC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도 제재하기에 이른다.

미국이 대중국 기술전쟁에 돌입한 이유는 중국의 노골화된 미국 패권 도전을 최첨단 기술 분야의 우위를 통해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도체는 이미 2000년대 경제성장의 핵심에 서 왔고 5G 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AI) 등이 중심이 된 4차산업혁명 기술은 미래 경제성장은 물론 군사기술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⁴³⁾ 미국은 반도체 설계의 우위를 제조에서의 우위로 연결시켜 빠른 과학기술 성장에

41) 최원석, “[5Q경제] 과연, 화웨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선일보 2020.05.2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4/2020052401854.html (검색일: 2021.05.20.).

42) 이기문, “비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 알쏭달쏭한 반도체 용어들,” 조선 비즈 2019.05.0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2/2019050200101.html (검색일: 2121.05.19.).

43) James Johnson, “The end of military-techno Pax Americana ? Washington’s strategic responses to

기반한 중국의 경제적 안보적 도전에 대응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러한 미국의 계산은 새롭게 들어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바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반도체 정상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반도체 공급망을 지배하려고 공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삼성과 TSMC 등 반도체 제조업체에 ”미국의 경쟁력이 당신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달렸다”며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청했다.⁴⁴⁾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초강대국 미국이 이제 반도체 공급망의 미국 리쇼어링 (reshoring)을 주문할 정도로 중국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은 이미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제조 2025 (中国制造 2025) 정책을 발표한 이후 반도체 분야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시작한 상태이다. 2019년 기준 15.7%에 불과했던 반도체 자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활용해 자국 기업의 외국 기업 인수·합병 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도체 산업의 자립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측된다.⁴⁵⁾ 중국은 지난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연례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초안의 7대 중점 과학기술 연구 항목 중 하나로 반도체를 제시하기도 했다.⁴⁶⁾

Chinese AI-enabled military technology,” *Pacific Review* Vol. 34, No. 3 (2001), pp. 351-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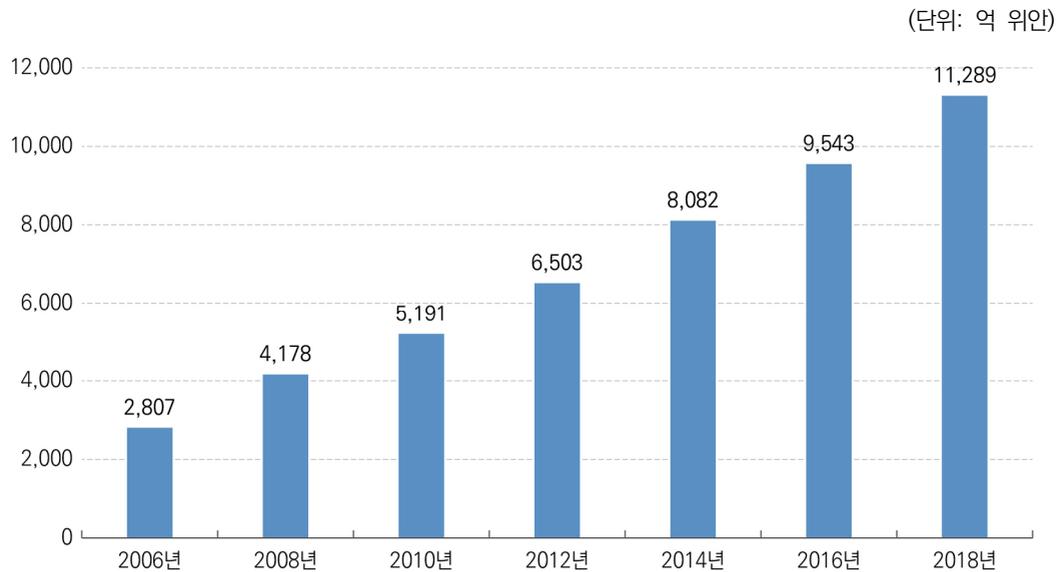
44) Jenney Leonard, Keith Laing, Josh Wingrove In call with CEOs, Biden doubles down on a \$50 billion plan to invest in chips Fortunes April 13 2021 <https://fortune.com/2021/04/13/in-call-with-ceos-biden-doubles-down-50-billion-plan-invest-chips/> (검색일: 2021.05.20.).

45) 강현우, “중국 반도체 자급률 15.9%...요원한 ‘반도체 굴기,’ 한국경제 2021.02.24.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2247584i> (검색일: 2021.05.21.).

46) 최현준, “더 어려워진 중국 ‘반도체 굴기’... ‘반도체 부족, 미국 제재 탓,’ 한겨레 신문 2021.04.1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0850.html (검색일: 2021.0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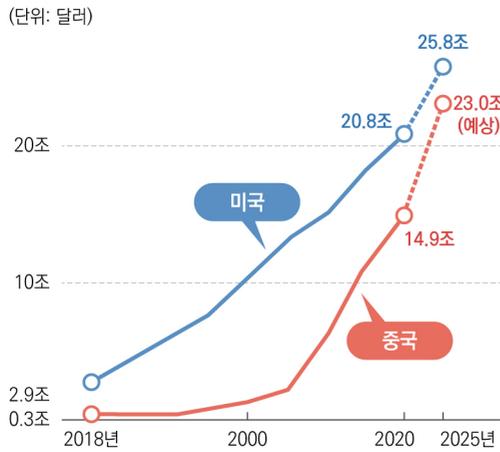
(3) 중·미 안보경쟁

이상에서 언급된 무역 혹은 경제 및 기술 경쟁이 격화된다면 그다음 미-중 경쟁 상황은 어떤 식으로 벌어질까? 많은 수의 안보관련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대결-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경제적 개입에서 중국의 부상을 통제하지 못하면 앞선 시나리오대로 중국은 미국을 군사적인 면에서도 따라잡을 것이며 이는 미국의 최대 불안 즉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게 뒤처지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아래 그림은 앞으로 전개될 중국과 미국 간의 힘의 균형을 특히 군사적 균형에 초점을 두어 시각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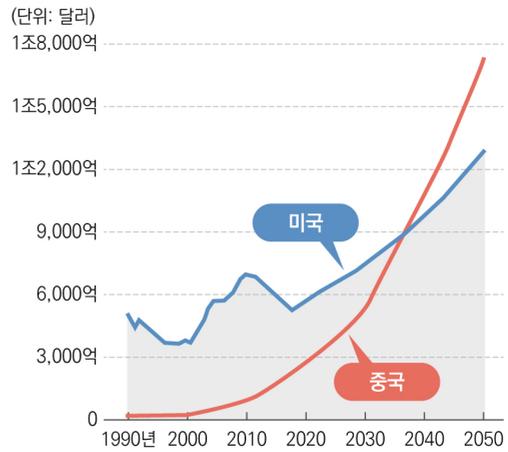


[그림 11] 중국의 연도별 국방비 추이

출처: 한국일보



[그림 12-1] 미·중 GDP 추이



[그림 12-2] 미·중 국방예산 추이

출처: IMF; 미국 국방정보국;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한국경제; 중앙일보

예측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중국은 현 7%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2035년부터 2040년 사이에 군비지출 규모로 측정되는 군사력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중국과 미국은 소위 말하는 화약고 (flashing points)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군사적 대립을 지속할 것이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북한, 대만해협 등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의 대미 관계는 전형적인 초강대국간의 패권경쟁으로 전환될 것이다. 과거 중국의 대미 관계가 주로 자국이 핵심이익 (core interests)라고 정의한 대만 문제, 남중국해 소유권 문제, 동중국해 소유권 문제 등에 미국이 간섭하는 경우 중국이 강한 대결적 행보를 보이는 구조였다면 앞으로의 중국의 대미정책은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대결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미국이 중국의 주장하고 있는 핵심이익에 대해 집중적으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경우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심지어 충돌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미국이 타이완의 일부 도서 등을 선제적 수용하요 미군의 전략 자산을 배치한다면 중국은 지금까지 보여준 자신의 강성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위기는 곧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로 시

진핑 주석은 2019년 벽두부터 ‘대만동포에 고하는 글(告台湾同胞书)’ 발표 40주년 기념 담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⁴⁷⁾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및 중국 민족 감정과 관련돼 있는 만큼 어떠한 외부간섭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여 미국을 향해 선제적으로 타협하기 어려운 핵심이익의 민감성에 대해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들 화약고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미·중간의 전면전쟁 (total war)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최근 RAND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이들 모든 잠재적 충돌의 장소에서 미국과 중국의 2차 핵 보복능력 (second strike capability)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⁴⁸⁾ 세력이 전이 되도 전쟁은 미·중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인명적 피해를 요구한다. 국제사회 전체가 미·중간의 분쟁이 3차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규범 (nuclear taboo)도 존재한다. 작은 전쟁 혹은 저강도 분쟁들이 2045년 이후 미·중관계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겠지만 관리된 적대감 (managed hostility)가 이후 질서를 주도 할 것이다.

2. 중·일 관계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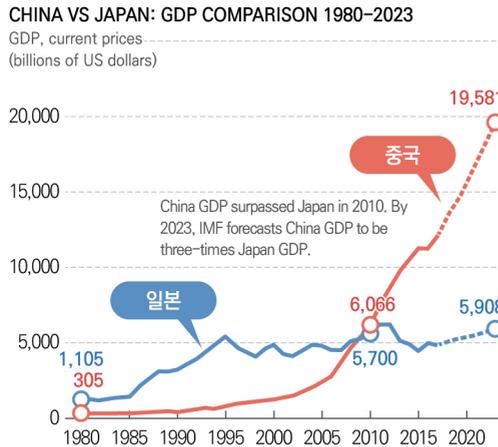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일인자 자리를 두고 수십년을 경쟁한 국가이다. 근대화 이후 중국의 아성에 먼저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통해 아시아를 제패했다면 중국은 1949년 현대 중국 수립 이후 공산화되면서 미·일 동맹과 대립하며 아시아 맹주를 자처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냉전 시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각 그리고 공통의 적(敵)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은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을 막았다.

이러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은 소련의 해체와 탈냉전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부상으로 그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찬란한 1990년대를 지나면서 중국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은 2000년대도 지속 되었고 2010년에는 결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47) 김외현, “중국 대만에 무력사용 포기 않는다,” 한겨레 시문 2019.01.02. <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76754.html#cb> (검색일: 2021.06.23.).

48) David C. Gompert, Astrid Stuth Cevallos, Cristina L. Garafola, *War with China: Thinking Through the Unthinkable*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2016), pp. 54-57.

아시아 최고-GDP 규모 면에서-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2000년대 후반 일본을 추월한 중국은 이후 격차를 더욱 벌려 이제는 일본이 아닌 국을 상대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림 13-1] 중·일간의 GDP 역전



[그림 13-2] 중·일간의 군비지출 변화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Economist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대적 힘의 분포 변화는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체계적으로 악화시킨다. 이제 일본이 상대해야 하는 중국은 과거 쇠퇴하던 청조(淸朝)도 아니고 외부와 고립된 공산 중국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 대국인 중국이었다. 중국은 특히 경제적 군사적 자신감에 근거하여 과거 일본과의 화해되지 않은 역사를 재소환하여 내부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를 고양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팽창적인 영토 및 영해정책에 사용하면서 일본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이른다.

중국이 보기에는 일본은 이러한 중국의 팽창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냉전 시기부터 현재까지 미·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군사력의 동북아 침투의 최전선에 나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이 보기에는 정당한 자신의 영토적 주장을 과거 식민지 시절 주장에 근거 아직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군사전략인 아시아재균형전략과 인도태평양전략에 항시 핵심 주축 국으로 참여해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당연히 중국의 대일본 위협인식 역시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악화된 양국의 위협인식이 구체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센카쿠/다오위타이 갈등이다.

이 조그만 무인도에 관한 갈등은 2차 세계대전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고 이 과정에서 센카쿠/다오위타섬 (무인도)를 강제 병합한다. 이후 2차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으나 전승국 미국이 이 섬에 관한 소유권을 상당히 모호하게 처리했으며 이어진 냉전 시기 중국과 일본은 양국의 필요에 따라 이 무인도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수면 아래로 묻어두게 된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자신의 영토적 이익을 팽창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센카쿠/다오위타이 관할권 및 소유권 문제를 다시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과 대결하게 된다. 이후 이 갈등은 양국 간 갈등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림 14] 중·일간 동중국해 갈등

출처: Korea Daily Times

현재까지 센카쿠/다오위타이 섬에 관한 중국과 일본의 주장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 근거를 들어 이 무인도를 중국이 가장 먼저 발견하였고 실효적 지배를 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거칠게 도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명나라 시대에 대만 어부들이 센카쿠/다오위타이 섬을 조

업에 이용하고 중국 사신들이 오키나와를 왕래하면서 센카쿠를 거쳤다는 기록을 갖고 있으며 1893 서태후가 센카쿠 약초꾼에게 섬을 하사하였다는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역사적 근거가 있는 섬을 일본 제국주의가 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895년 청·일 전쟁 후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일본이 이 섬을 일방적으로 강탈했고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자신의 영토로 편입했으므로 일본의 식민지배 패전을 알리는 2차대전 후 카이로 포츠담 회담 정신에 의거 센카쿠는 당연히 중국에 반환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⁹⁾ 따라서 일본의 패전을 다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 제국주의 유산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한 측면이 강하므로 이 조약을 근거로 본 섬의 처리를 논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일본은 이런 역사적 주장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 센카쿠/다오위타이 관할권에 관련된 기존의 국제법 혹은 조약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이 중시하는 것은 일본이 2차대전 패전 후 미국과 1951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다. 일본은 이 패전조약에서도 센카쿠/다오위타이 섬의 영유권을 미국으로부터 그대로 인정받았으므로 중국의 역사적 근거에 기반한 소유권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미국이 센카쿠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다 1971 일본에 반환까지 했으므로 일본의 소유권은 자동 재생성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무인도 소유권에 관한 양국의 극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기와 냉전 붕괴 후 적어도 1990년대에는 이 문제가 양국 간의 주요 갈등으로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된 2000년대 후반 소유권 갈등은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갈등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군사적 자신감에 근거 동중국해 갈등을 이용 자국의 영토적 이해관계를 팽창적으로 정의하는 교두보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묻어두었던 과거 역사적 양금을 소환하고 내부적으로 발흥하고 있던 민족주의를 동원 센카쿠/다오위타이 갈등에서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

중국의 이런 동중국해에서의 공세적 움직임은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매우 악화시켰고 적극적이고 심지어 과잉 대응을 가져오게 된다. 이미 2010년 GDP 규모 면에서

49) 남궁영, 김원규,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간 분쟁의 함의: 공격적 현실주의적 접근,”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31권 1호 (29013), p. 1-2.

아시아 일위 경제 대국 지위를 빼앗긴 상태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도발은 일본의 입장에 선 강화된 군사력에 기반한 영토적 팽창의 신호로 읽혔고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 연대하여 이를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현상유지 파괴 시도로 보게끔 만든다.

이 와중에 2012년 9월 동중국해 위기가 발생한다. 위기의 원인은 센카쿠/다오위타이 해역에서 중국 트롤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것인데 이 사건의 와중 일본 순시선이 중국 트롤어선 선장을 나포하였고 중국 정부는 일본 순시선이 나포한 중국인 선장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대일본 경제제재에 나선다. 특히 미사일, 하이브리드자동차, 풍력발전기의 필수 자원으로 알려진 히토류 (중국이 93% 생산)의 대일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을 압박했고 이에 일본이 한발 후퇴하면서 구금 중인 중국인 선장을 2주 만에 석방하게 된다.⁵⁰⁾

하지만 기존의 악화된 대중국 위협인식에 동중국해 위기까지 겪게된 일본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중국과 전면 충돌하게 된다. 일본은 2012년 센카쿠/다오위타이 섬의 국유화 해 버린다. 아울러 섬 인근 해역에 일본 순시선 순찰을 대폭 강화했으며 여러 차례 미국을 설득 센카쿠/다오위타이 섬이 미일 군사동맹의 보호 대상임을 공표하였으며 만약 이곳이 외부세력 (중국을 잠재적으로 지칭)에 의해 공격 받을 경우 미국이 일본과 협력하여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가장 강한 수준의 외교적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⁵¹⁾ 이후 동중국해 문제는 중국을 한 축으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또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동북아내 대표적인 안보갈등으로 격화되게 된다.

요약하자면 향후 중국은 일본과 매우 갈등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 핵심은 두 아시아 맹주의 각자에 대한 악화된 위협인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및 군비성장이 지속된다고 볼 때 이런 갈등적 관계 역시 지속될 것이다. 물론 이 갈등적 관계의 핵심에서 중국의 대일 정책을 공세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센카쿠/다오위타이 섬 갈등이다.

50) 김우형, "중국의 에너지자원 전략과 한국의 통상전략," 『한국동북아논총』 제65호 (2012), pp. 5-6.

51) Ankit Panda, Obama: Senkakus Covered Under US-Japan Security Treaty Diplomat April 24 2012. <http://thediplomat.com/2014/04/obama-senkakus-covered-under-us-japan-security-treaty/> (검색일: 2021.0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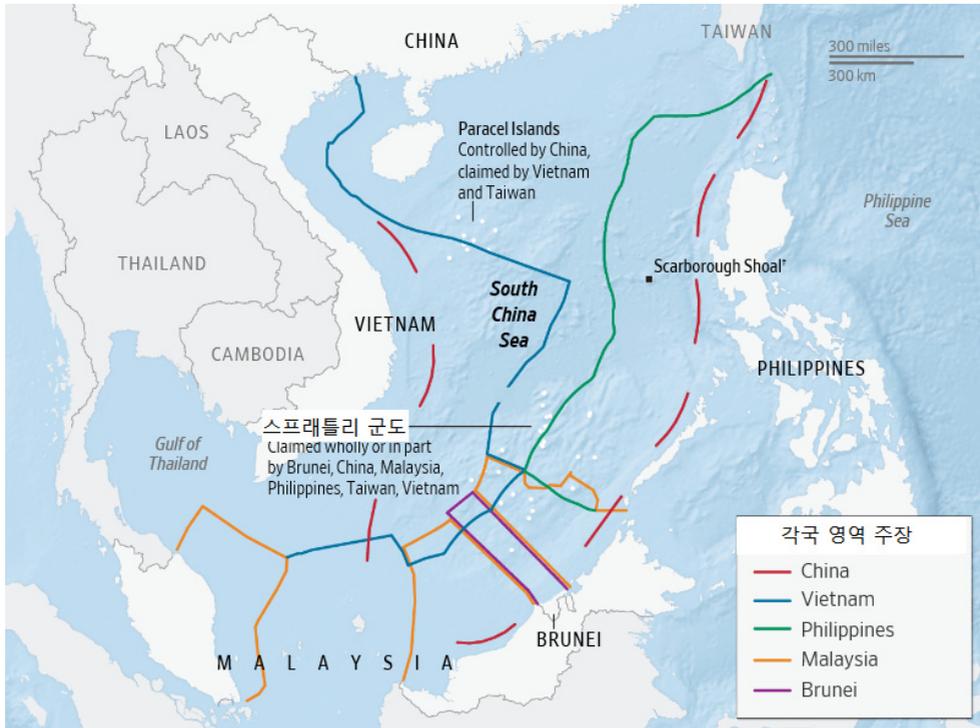
3. 중국의 동아시아 관계의 미래

중국이 눈부신 경제성장과 이에 기반한 군사적 부상을 진행함에 따라 중국의 국제관계 특히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중국은 주변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서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 모두가 이기는 (win-win) 관계 혹은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정책 (principled foreign policy)을 추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 수사에 맞추어 주변 아시아 국가를 향해 협력적 외교 관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는 이는 드물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군사적 성장을 밀어붙이면서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이미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력과 무기체계의 근대화(modernization)작업 그리고 대양해군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이 천명한 상호이익과 원칙기반의 외교에 물음을 갖게 만들고 있다.

(1) 중국의 동남아시아 관계 미래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지 않은 동남아 ASEAN 국가들 (타이와 인도네시아 제외) 과의 분쟁이다. 실제 미래 중국위협론을 주장하는 많은 현실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전형적인 강대국의 영토 혹은 영해 확장정책으로 보며 경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²⁾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는 이유는 중국이 단순한 역사적 근거에 의한 남중국해 여러 섬을 자신의 역사로 편입 교육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 왜곡을 통한 구단 선을 일방적으로 선포 이 선의 내부에 있는 섬과 바다에 대한 중국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남중국해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52) Michael Yahuda, "China's New Assertiveness in the South China Se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a Vol. 22, No. 81 (2013), pp. 446-459.



[그림 15]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사기지화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펜앤드마이크에서 재인용

남중국해 문제는 원래 중국의 남중국해로의 해양영토 팽창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은 중국 지도부의 팽창적 국익 정의로 이어졌고 이런 자신감에 근거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구단선(九段線)을 주장하여 남중해 중국의 일방적 경계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의 주요 군도-즉 동사 군도, 파라셀 제도, 중사 군도, 스카보로 암초, 스프래틀리 군도-가 모두 중국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이다. 남중국해 갈등은 역사적으로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루나이 간의 남중국해 도서들에 대한 귀속권 주장이며 동시에 해양 경계선 분쟁이다. 이 분쟁은 냉전붕괴 이후 급속한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이루어낸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본격화 되기 시작되었고 중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국력이 약소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동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이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가장 먼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은 이 지역을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상정하고 자신들이 역사적 근거에 의거 설정한 구단선 내부에 존재하는 암초, 섬 그리고 해양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 섬에 중첩되는 소유권 주장을 하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그리고 브루나이와 극심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남중국해 일방주의에 대해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 상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원칙을 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 대 중국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이미 남중국해의 주요 섬들을 군사화(militarization)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구 및 부두시설을 건설하고 항공기 활주로를 깔고 있으며 레이더 기지 역시 건설하면서 노골적인 일방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⁵³⁾

특히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차원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사활을 걸고 대응하고 있다. 명목상 미국은 국제규범(international norm)으로서의 항행의 자유를 근거로 중국에 대항하고 있는데 이 규범이 1982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주권국가의 국기를 달고 항행하는 국적이 확인되는 선박은 타국으로부터 항행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항행은 선박운행의 자유, 항구 접근에의 자유, 그리고 화물 선적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미국은 이를 인용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화는 다른 국가의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매우 비판적이지만 그 입장은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강경한 입장을 주도하며 중국의 구단선 주장에 대해 남중국해 전체가 중국에 속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일방적인 행동, 힘에 기반한 강압, 국제법 침해, 군사기지화, 국제법이 보장한 베트남의 주권과 영유권 침해 등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⁵⁴⁾ 친중 정책을 펴

53) 이동률, “중국 주변외교의 진화와 대중국 통일외교의 함의,” 『KINU통일+』 (여름)호 (2016), pp. 41-48.

54) 안승섭, “남중국해 중국 바다 아니다”...목소리 높이는 동남아 국가들,” 연합뉴스 2019.12.29.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9026000074> (검색일: 2021.06.23.).

는 것으로 알려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역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안경비대를 대폭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향후 10년 대동아시아 대외관계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중국 스스로가 핵심이익으로 정의하고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는 남중국해 소유권 문제를 대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뒤에 미국과 일본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해양팽창의 교두보인 남중국해 진출을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뒤에 언급될 호주로부터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 양안관계(兩岸關係)의 미래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 못지않게 동북아 국가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몇몇 국가와는 숙적국가 (rivals) 관계에 빠져있다. 중국의 대(對)동북아 국제관계와 관련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국가는 대만이다. 중국은 대만과 관련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정통성이 없는 대만이 대륙의 기대를 저버리고 독립을 선언한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하나의 중국을 지켜내겠다는 초강경 노선이다. 다행히 국민당 마잉주 (Ma Ying-jeou) 대통령 (2008-2016) 대만은 무리한 대륙으로부터의 독립보다는 경제적 교류협력을 증시하는 실리외교로 중국의 불안을 잠재웠다.⁵⁵⁾ 하지만 2017년 대통령에 취임한 차이잉원 (Tsai Ing-wen) 대통령은 민진당의 유산을 계승 여건이 되면 대만의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2019년 시진핑 주석이 보낸 서면에서 주장한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시스템 (One China and Two systems)을 단호하게 거절하여 향후 양안 관계가 수월치 않을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대만해협은 다시 한번 긴장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친대만 행보를 중국 견제용으로 강화하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과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많은 안보전문가들이 미·중 전략경쟁이 자칫 잘못하면 대만해협에서 군사충돌로 이어질수 있다는 경고를 하게끔 만들고 있다.

55) Yasuhiro Mastsuda, "Cross-Strait Relations under the Ma Ying-jeou administration: From Economic to Political Dependence?,"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n Studies* Vol. 4, No. 2 (2015), pp. 3-4.

중국은 이미 2005년 제정한 ‘반국가분열법’에서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봉쇄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중국의 판단에 의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선언한 상태이다. 물론 이후 중국대륙과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이던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이 집권하여 양안관계는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했으나 2016년 대만 독립을 선호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총통에 당선된 이후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의 움직임도 매우 적극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단되었던 대만 고위급 관료들과의 교류를 지시했으며 2020년 10월 6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타이완에게 “미국이 안보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발언해 베이징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향후 양안관계에서 대만의 정치적 지위 문제를 둘러싼 대만, 중국 그리고 미국의 입장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다. 미국과 타이완은 계속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지위를 재고하고자 할 것이며,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더 강경한 대결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언제든지 대만해협의 상황을 위협하게 만들 수 있다.

(3) 중국의 대북한 관계의 미래

중국의 대 아시아 관계 관련 마지막 변수는 북한이다. 중국의 패권국의로의 부상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시나리오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이를 군사적 도발로 이어가는 경우다. 이 경우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북한을 두둔한다면 중국은 미래 성장에서 두 가지 희생을 치러야 한다. 가장 먼저 중국은 미국의 한·미·일 삼각 동맹을 이용한 보다 강화된 중국 개입을 마주해야 한다. 북한의 핵 도발과 중국의 암묵적 지원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지속적 배치와 한국과 일본에의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한 서해와 동해의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의 지속으로 이어지며 이 경우 중국은 목전에서 미국 전략폭격기와 함대 항공모함을 동원한 훈련을 지켜봐야만 한다.

중국의 지속적인 북한 지지는 자신의 ‘국제정치에서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 (responsible stakeholder) 및 ‘신형 대국 관계’(new great power relationship)라는 자신의 이미

지에 상당한 부정적 역할을 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핵 보유 깡패국 (nuclear rogue)로 지명된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성의 흠집 (reputation costs)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아울러 북한에 대한 지지와 미국 주도 UN 안보리제재라는 모순적 상황에서 오는 중국 내 대북정책 이분화의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⁵⁶⁾

하지만 중국이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래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직 중국 핵심지도부의 사고는 북한이 완중국이라는 전략적 사고가 지배적이며 특히 중국 군부(PLA)와 국제부서 (ID)가 이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북한 지원 철회 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및 혼란 그리고 이로 인한 미국과 한국의 개입 등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북한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이다. 중국의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가정할 때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지속적으로 하는가는 큰 문제가 아니게 된다. 관계가 악화된 미국을 견제하기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는 북한만큼 좋은 전략적 자산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모든 면에서 패권경쟁 단계로 접어든다고 가정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전통적인 혈맹(血盟)론을 다시 소환시켜 군사적 관계개선에 나설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이다.

4. 중국 호주 관계의 미래

중국과 호주 관계가 그 바닥을 치고 있다. 양국관계에 관심을 지녀온 많은 수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양국이 지난 50년 외교적 관계에서 가장 갈등적 관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당분간 이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다.

두 아시아 태평양 강국의 갈등은 명목상 2017년 중국계 자금의 호주 국내정치로의 유입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 문제로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

56) Dingli, Shen (2013) "Lips and Teeth: It's Time for China to Get Tough With North Korea (February 13), pp. 1-3.

다.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의 중국연구소 기원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국제 사회 공동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7)

하지만 이러한 중국과 호주 관계 악화의 근저에는 호주에서 점차 증가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다. 호주 정부는 얼마 전 빅토리아 주(州) 정부가 서명한 중국 정부와 서명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관련 계약을 연방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관리법을 통과시켰다.⁵⁸⁾ 게다가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화웨이(Huawei)의 5G 네트워크 사업을 금지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런 중국경제 영향력 축소 움직임은 2018년까지 올라가 호주 정부는 당시 중국의 호주 내 인프라, 농업 그리고 축산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 시켰다.

중국은 호주와 중국 내부의 인권문제로도 충돌한다. 호주는 최근 미국 영국과 함께 신장과 위구르 지역의 인권탄압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뉴질랜드와 낸 공동성명에서 신장지역에서 중국정부가 불법수술, 강제노역, 감금과 고문등의 인권침해를 광범위 하게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며 중국이 인권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섰다.⁵⁹⁾ 중국은 이에 대해 주권 사항이라고 반발하며 오히려 호주 정부의 원주민정책 문제를 비판하면서 다시 대립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양국관계의 마찰의 그 근저에는 중국의 패권국으로의 급부상과 호주의 악화된 대중국 위협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는 2020년 국방전략 업데이트(2020 Defense Strategic Update)와 2020년 군사력 구조 계획(2020 Force Structure Plan)에서 어떤 종류의 규칙기반의 국제질서를 흔들려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하면서 인도 태평양지역에서 국가 간 무력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특정 국가가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비군사적 '회색지대 활동'(grey zone activities)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 첫 번째 예로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예를 들고 있다.⁶⁰⁾

57) Colin Packham, "Australia says world needs to know origins of COVID-19," Reuter Sept., 26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australia-china-idUSKCN26H00T> (검색일: 2020.11.30.).

58) Michael Fowler, "That's not leadership': Andrews warns cutting Belt and Road will hurt Australian businesses," The Age December 9 (2020) <https://www.theage.com.au/national/that-s-not-leadership-andrews-warns-cutting-belt-and-road-will-hurt-australian-business-20201209-p56m18.html> (검색일: 2021.5.29.).

59) Daniel McCulloch, "Australia, NZ condemn human rights abuses carried out by Chinese government," 7News March 23 2021 <https://7news.com.au/politics/world-politics/australia-nz-condemn-abuses-in-xinjiang-c-2412761> (검색일: 2021.06.21.).

호주의 선택은 이미 미국 쪽을 향하는 듯하다. 특히 호주의 아시아 태평양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참여는 이를 반증한다. 쿼드는 그 목표를 아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늘어나는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비한 군사적 연합이라고 못 박고 있으며 현재 4개 국가-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체제 수준에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선 앞으로 호주에 대한 위협 인식이 더욱 악화 될 수 밖에 없다.⁶¹⁾ 향후10년간 중국의 대호주 정책이 좀 더 대결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이유이다.

5. 중·러 관계의 미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국제정치의 상식인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이고 오늘의 친구가 어제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이 1949년 건설된 이후 중국은 경제 및 군사적 근대화에서 러시아(과거의 소련)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1960년대 소련의 스탈린 격하 운동과 1969 국경분쟁으로 중·소 분열(Sino-Soviet Split)을 겪으면서 서로를 적대한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냉전 이후 2001년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에 의거 다시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이 조약에서 양국은 핵무기 선제사용 불가, 핵미사일 상호겨냥 금지, 국경선 200km 이내 군사적 투명성 원칙에 기반한 위협 행동 금지 등에 합의하였다.⁶²⁾ 이후 약 10년간 중국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교류를 급격하게 증가시켰으며 다양한 군사적 협력관개를 발전시켜 나갔다. 군사과학 협력이 증대되고 군사정보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우주기술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전되었고 러시아의 대중무기판매 역시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대러시아 관계가 중요해진 시점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이후이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아시아 최고의 경제 대국 자리에서 밀어내고 지역 강대국을 넘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패권경쟁을 벌이기 시작했

60) Ben Scott, "Australia must enter the grey zone to counter threats of the future," The Lowy Institute Commentary July 6 (2020) <https://www.loyyinstitute.org/publications/australia-must-enter-grey-zone-counter-threats-future> (검색일: 2021.05.07.)

61) 유재광, "중국-호주 관계 악화와 그 원인," 중국전문가포럼(CSF) 전문가 오피니언 2021.01.25.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1058&mid=a20200000000&board_id=4 (검색일: 2021.06.21.), p.5.

62) 김규철, "중·러 군사협력, 동맹인가 일시적 협력인가?" 『중소연구』 제44권 제1호 (2020), p. 183.

고 이 패권경쟁은 최근 들어 점점 격화되어 있다. 앞서 지적된 무역과 기술 분야 그리고 해양분야는 물론이고 최첨단 전략 무기 자산들 즉 해군력, 공군력,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과 전술핵 등의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가파르게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미국의 중국 군사적 견제시도 역시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하의 미국은 피봇과 아시아의 재균형정책으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장을 억지하고자 했으며 이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와 최근의 바이든 행정부의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로 구체화 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전방위적 중국 압박에 중국 정부가 들고나온 것이 러시아 카드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3년 이후 2011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승격된 러시아와의 외교·안보 협력을 더욱더 강화한다, 취임 후 최초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사상 최고의 대국관계”라고 치켜세웠으며 이후 30차례의 공식 비공식 정상회담을 통해 중러 밀월관계를 주도해 나간다.⁶³⁾

이러한 중국의 러시아와의 밀월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초강대국 미국을 혼자 상대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첨예한 이해관계 갈등을 겪는 러시아와 손잡아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고려이다. 이러한 중국의 의지는 최근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잘 드러난다. 중국은 미국의 사드배치가 북한견제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을 견제하려는 목적하에 실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여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힘의 균형을 시도하고 있다.⁶⁴⁾ 연례화된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연합 훈련을 비롯 최근 동북아 국가들의 방공식별 구역을 쉽게 넘나드는 공중훈련-전략 폭격기 연합정찰 훈련-그리고 사드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행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협력 강화 모두가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목적이 강하게 투영된 것이다.⁶⁵⁾

따라서 향후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호의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대상은 러시아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심화는 자연스레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가져

63) 위위 글, p. 186.

64) 이기현, “중국의 한국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적 불편과 희망적 사고,” 『국제관계연구』 제23권 제2호 (2018), pp. 41-42.

65) 김규철 2020, p. 192.

을 것이고 중국은 이를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돌파하려 할 것이다.

Ⅲ 소결

중국의 2030년경의 미래는 중국이 앞으로 형성할 대외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미래의 대외관계를 갈등형과 협력형으로 이분하자면 중국은 전자의 형태로 앞으로의 대외 관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는 이미 모든 분야에서 단순한 경쟁을 떠나 패권을 두고 겨루는 패권경쟁에 돌입하고 있으며 이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다. 지금은 무역과 기술 경쟁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인 안보영역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중국의 다른 국가들과의 대외관계는 미국과의 관계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심화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이후 중국의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와의 관계가 갈등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국가 모두가 현재 갈등과 협력의 이중 동학 (dual dynamics)을 중국과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심화로 미국 쪽으로 자신들의 외교·안보 정책을 선회할 들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남겨진 전략적 파트너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될 것이다. 어디서 본 듯한 이러한 갈등 구조는 이미 동아시아가 냉전 초기에 경험한 갈등 구조이고 이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립이 동북아에 신냉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제5장

코로나와 중국의 미래, 2030

제5장

코로나와 중국의 미래, 2030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글에서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중국의 미래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 여부를 중심으로 예측해 보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양국이 팬데믹 관련 책임소재에 있어 극심한 자국 이기주의적 사고에 빠져있으며 이 위기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정치화 (politicization)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화란 본래 인간의 정치적 본성 즉 특정 이슈를 자기가 속한 그룹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기가 타자(他者)로 인식한 집단의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해 쓰는 행위를 말한다.⁶⁶⁾ 국제정치에선 이 인간이란 주어가 주권국가로 바뀔 뿐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이슈를 정치화시켜 자국의 위상 강화 내지는 타국의 위상 약화에 점점 몰두해 가고 있다.

양국의 이런 갈등적 관계는 국내정치적 원인도 한몫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고업적으로 내세우던 경제적 성과가 COVID-19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극도로 초조해했다. 중국은 트럼프가 팬데믹 초기대응의 실패를 떠넘기기에 아주 좋은 외부의 적이다. 정치적 정당성을 정치적 억압과 민족주의 그리고 경제적 성과에 기대고 있는 중국 공산당(CCP) 역시 팬데믹의 책임을 떠넘길 외부의 적이 필요했다. 중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미국은 중국이 보기에는 책임을 떠넘길 최고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미군이 COVID-19를 중국에 옮겨왔다”는 발언은 이를 입증한다.⁶⁷⁾

팬데믹 이후 미-중 관계 악화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는 남중국해 분쟁의 격화이다. 중국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팬데믹 초기 일방적인 봉쇄정책으로 적어도 형식적인 방역에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뒤를 이어 팬데믹을 경험했고 금융의 허브인 뉴욕

66) 유재광, “COVID-19 와 미중 패권경쟁의 초기소환,” 중국전문가포럼 (CSF) 전문가 오피니언 2020.10.25.p.2.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38715&mid=a20200000000https://csf.kiep.go.kr/issueInfo.es?mid=a20200000000&board_id=4&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tPage=7&pageCnt=10 (검색일: 2021.06.21.),

67) Thomas J. Christensen, “A Modern Tragedy? COVID-19 and US-China Relations,” *Brookings Foreign Policy* (May 2020), p. 5.

을 중심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심지어 남중국해 필리핀 주변 해역을 작전 반경으로 하는 핵항공모함에서조차 팬데믹이 집단발병하는 아주 이례적인 피해를 입고만다.

이 틈을 중국은 재빨리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Spratley Island)와 파르셀 군도(Parcel Island)를 중국의 행정 구역 (administrative district) 이라고 선언하였고 자신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 암초인 피어리 크로스 (Fiery Cross)와 수비 리프 (Subi Reef)에 대규모 연구시설을 만들었다.⁶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선박의 항해를 지속적으로 방해했으며 미국을 잠재적 적으로 설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남중국해에서 실시하였다.⁶⁹⁾

이에 맞서서 미국의 대응도 분주했다. 이미 2020년 4월 초 미국의 인도-태평양 합대 사령부 (the Indo-Pacific Command)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작전능력과 자원을 증가시킬 \$20억 달러의 방어체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에 초당적 지지를 보냈다.⁷⁰⁾ 전선은 남중국해로 좁혀져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어 등장한 바이든 대통령마저 이 지역 미군 군사 능력 증진에 적극적이다.

군사적 균형이 팬데믹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면 경제 분야에서의 미-중경쟁은 이미 그 이전에 최악의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미 1차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트럼프 하의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다.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가가 양국의 이익에 득이 된다는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미국의 발전된 기술이 경제교역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 결국 중국군의 군사적 혁신 (military innovation)과 이로 인한 국력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는 현실주의적 사고들에 기반 보호주의 색채가 짙은 경제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였고 이것이 1차 미-중 무역 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전쟁의 전선에서는 후퇴한 듯 보이나 기술전쟁을 시작으로 전 영역에서 중국을 포위 (encirclement)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68) Nehginpao Kipgen and Diksha Shandilya, "China asserts presence in the South China Sea amid COVID-19 crisis," *Korean Times* (April 14, 2020) http://www.koreatimes.co.kr/www/opinion/2020/04/197_287768.html (검색일 2020.6.15.)

69) Global Desk, "China Conducts Massive Military Drill in the South China to Counter U.S. Military Provocations," *Eurasian Times* (May 6, 2020) <https://eurasianimes.com/china-conducts-massive-naval-drill-in-the-south-china-sea-to-counter-us-military-provocations/> (검색일 2020.6.17.)

70) Charles Edel and Mira Rapp-Hooper, "The 5 Ways U.S.-China Competition Is Hardening," *Foreign Policy* (May 18, 2020), pp. 1-2.

팬데믹은 미국에게 중국과의 상호의존을 경쟁적 시각에서 보도록 만드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의료용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ventilators) 그리고 각종 검사 및 진단 장비 심지어 검사용 면봉 (swab)조차 중국에서 만들어져야 미국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⁷¹⁾ 이제 5G 통신과 같은 첨단산업뿐 아니라 제조업의 성격을 갖는 의약품 생산에서도 중국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의료용품과 약품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상호의존의 전면적 재검토 혹은 완전한 경제적 절연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패권 다툼은 핵심적 기술 분야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극명한 대립을 가져왔다. 이미 팬데믹 이전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와 디지털 감시장비 그리고 5G 무선통신 기술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중국은 이 기술이 미래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중국의 패권국 반열로의 부상에 핵심적이라 인식하고 공산당 주도의 국가개입을 통해 단시간에 끌어올리려 노력해 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하의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국가 주도 첨단산업의 발전이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는 이슈를 넘어 미국의 기술 흠치기에 바탕을 둔 국가안보상 위협을 줄 것이라고 보고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의 진입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⁷²⁾

미국 의회는 이미 당파(partisanship)에 상관없이 대중국 강경책을 주문하고 있다. 남중국해 갈등은 물론 쿼드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를 통해 일본은 물론 인도와 호주와도 연대해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미래는 이런 반중국 전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크게 달려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보건상의 위기가 중국의 대외관계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팬데믹 즉 코로나-19 위기는 미·중 패권경쟁을 조기소환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과 쿼드 그리고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을 넘어서 미국은 이제 중국에 코로나-19

71) Yang Lian, "The US, China, and the Perils of Post-COVID Decoupling," *Diplomat* (May 18, 2020) <https://thediplomat.com/2020/05/the-us-china-and-the-perils-of-post-covid-decoupling/> (검색일 2020.6.17.)

72) Katie Benner, "China's Dominance of 5G Networks Puts U.S. Economic Future at Stake, Barr Warns," *New York Times* (Feb., 6, 2020) <https://www.nytimes.com/2020/02/06/us/politics/barr-5g.html> (검색일 2020.6.12.)

의 기원문제를 따질 모양새다. 이른바 바이러스의 중국 우한 실험실 유출설을 바이트든 대통령이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그 동맹국 지지자들이 거들고 나섰다.⁷³⁾

중국은 이제 이 코로나 책임 문제를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미래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코로나 방역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성장 기초를 이어나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국내문제를 무리 없게 극복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코로나의 국제책임문제이다. 만약 중국이 국제사회의 치열한 코로나 기원 책임 공방에서 패한다면 소위 말하는 코로나 청구서를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로부터 받아야만 할 것이다. 반면 중국이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면 향후 국제관계에서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와 위상을 회복하고 미국에 좀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의심이 잘못된 만큼 미국 측에 책임추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대미 대결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73) Zachary Wolf, "The origin of Covid is now an intelligence operation," CNN 2021.05.26.<https://edition.cnn.com/2021/05/26/politics/what-matters-covid-investigation/index.html> (검색일: 2021.0621.).

제6장

중국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전략

제6장

중국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전략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중국의 미래는 단일한 시나리오로 정리하기 무척 어렵다. 하지만 정치영역, 경제영역, 그리고 국제 관계영역의 미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미래가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구간 (range)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각 분야의 우세한 예측을 단순화하고 이를 전체적인 중국의 2030년 미래라는 그림을 향해 엮어내 보면 중국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정치영역에서 모든 지표가 2030년의 중국은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유지될 것이며 이 통치도 일인지배체제에 의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크게 흔들 구조적 모순과 제도적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개인적 리더십의 공고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이 리더십은 내부적인 위기와 외부적인 위기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권력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성이 강하게 지배하는 정치영역에서 2030년까지 중국의 정치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진핑 주석 권력이 더욱 공고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경제는 조정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성장이 견인하는 초고속 성장이 아닌 6%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중국이 어느 정도 빠르게 서비스 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전환하여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낼수 있는 것인가 여부가 중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내부적으로 누적되어온 인구 고령화 문제와 빈부격차 문제가 성장률 저하의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 미래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내부 문제가 아닌 외부의 도전에서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정치는 일인 지배의 권위주의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경제는 성장률이 저하되겠지만 인구 고령화나 소득 양극화가 경제 질서를 교란하여 정치적 대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

다. 이 경우 2030년 중국의 정치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농후한 권위주의 체제로 귀결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중국의 대외관계이다. 중국의 대외관계는 2030년경 모든 주변국과의 관계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 중국 외교 관계의 특성상 우방국은 급증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겪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 관계는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과의 경쟁은 무역을 둘러싼 경제 분야를 넘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발빠르게 넘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코로나 진원지 문제와 맞물려 전형적인 세계관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권위주의, 인권탄압, 투명성의 부족, 부패 등의 이유로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이러한 압박이 미국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유럽국가들 그리고 호주마저 이미 중국과 대립국면을 조성하며 반중 전선에 뛰어 들고 있으며 미국은 여기에 더해 중국의 속적 인도까지 전략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대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사면초가에 둘러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중국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반중 전선을 대응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미래에 한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중장기적 성격이 짙겠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 도출이 가능하다. 가장 먼저 한국은 중국이 처하게 될 국제정세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와 중국이 대북 문제와 관련 행사해온 외교적 영향력 때문에 중국의 부상을 적극 수용 (accommodation) 해 왔다. 하지만 동시에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 (安美經中) 자세를 취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향후 10년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갈 가능성을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만약 이 평가에서 중국의 고립이 추세가 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의 높은 대중국 의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중국에 치우친 무역의존도 줄이기이다. 사드배치 갈등과 이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재에서 확인했듯이 향후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한국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한국 무역의 대중국 의존도는 최근 급증하는 상호의존의 무기화 (weaponized interdependence)에 너

무 취약하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때는 상관없으나 제2 제3의 사드와 같이 중국과 안보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비대칭적으로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이는 중국의 경제제재 (economic sanctions)에 너무도 취약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전략산업은 물론이고 핵심산업의 원자재 및 소재 그리로 중간재 등 위기시 경제제재로 인해 한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항목의 대중국 의존도를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한다.

대중 경제 의존도를 줄일 시 경제영역에서 당연히 발생할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제는 분명 민간과 시장의 영역이지만 국가도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좀더 치열한 경제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선박과 반도체는 물론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영역에 좀더 적극적인 연구개발 (R&D)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동아시아 내부의 무역질서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설치와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체결을 주도했으며 심지어 라이벌 일본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도 가입 의사를 밝히는 등 동아시아 자유무역질서를 주도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가입한 AIIB와 RCEP에서 적극적인 제 목소리 내기와 CPTPP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한발 앞서가는 일본의 사례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장기간 트렌드화될 경우에 발생할 북핵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강화된다는 것은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한국의 대중국 입지가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악화되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응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복원시키려 할 것이고 이 경우 대북 경제제재 및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상황에서 북한의 핵 혹은 미사일 도발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기 어렵다. 이 경우를 대비 한국은 향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중국 의존도 줄이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간 고위급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준(準) 제도화시키는 전략을 중장

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드 문제에서 경험했듯이 한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 미·중 패권경쟁의 한 가운데 위치할 경우 중국과 급속한 관계냉각을 경험해야만 하는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부정기적 정상회담과 외교부 장관 회담 그리고 대사관급 외교 관계가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사드갈등으로 사실상 드러났다. 만약 미·중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안보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경우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않된다. 공식 및 비공식 차원에서 형성할 수 있는 중국과 가능한 다양한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중문

- 李俊. 2020. “改革开放以来的民主理论:历程、议题及趋势.” 政治学研究. 2020,(06)
- 廖清成, 罗家为. 2020. “民主集中制与协商民主“互嵌”关系的三重逻辑论析,” 理论视野. 2020 (11)
- 钱再见, 汪家焰. 2020. “中国特色社会主义参政党民主监督的逻辑体系研究.” 山西师大学报(社会科学版). 2020,47(06)
- 温丽娟, 王瑜. 2020. “中国特色选举民主与协商民主协同发展机理研究.” 黑龙江社会科学. 2020 (04)
- 徐娜. 2020. “中国共产党领导的多党合作制度的发展历程与经验分析.” 人文天下. 2020 (20)
- 王永香陆卫明. 2021. “社会主义协商民主的科学内涵、鲜明特色与时代价值.” 北京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21,21(01).
- 刘九勇. 2020. “中国协商政治的“民主性”辨析——一种协商民主理论建构的尝试.” 政治学研究. 2020,(05)
- 郭一宁, 郭笑羽. 2020. “试论十八大以来中国共产党党内民主建设的“三个统一”.” 呼伦贝尔学院学报. 2020,28(03).
- 吕承文, 司马双龙. 2020. “协商民主视角下中国特色政党政治的结构功能分析.” 领导科学. 2020,(20)
- 王洪树, 郭玲丽. 2020. “中国之治”与“西方之乱”的民主政治根源解析.” 河南社会科学. 2020,28(10)
- 张吉雄. 2020. “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政治的新发展.”

- 贾立政. 2020. “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政治的创新发展.” 人民论坛. 2020,(24)
- 胡凯, 程兰. 2020. “习近平对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政治的创新性发展.” 理论视野. 2020,(08)
- 刘振琳, 王乃一. 2020. “中国社会主义民主政治的鲜明特征.” 思想政治课研究. 2020,(04)
- 刘桃李. 2020. “中国新型政党制度的民主价值探析.” 陕西青年职业学院学报. 2020,(03)
- 温丽娟, 王瑜. 2020. “中国特色选举民主与协商民主协同发展机理研究.” 黑龙江社会科学. 2020,(04)
- 李捷. 2020.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对邓小平理论的坚持发展和创新之四发展社会主义民主政治.” 新湘评论. 2020,(13)
- 石仲泉. 2020. ““中国之治”:党和国家制度建设的伟大工程——兼论中国特色社会主义政治体制改革新路.” 中国青年社会科学. 2020,39(01)
- 郭一宁, 郭笑羽. 2020. “试论十八大以来中国共产党党内民主建设的“三个统一”” 呼伦贝尔学院学报. 2020,28(03)
- 刘维芳. 2020. “改革开放以来中国政治制度建设的历程及启示.” 中国井冈山干部学院学报. 2021,14(01)
- 鄢一龙. 2020. “中美政治体制比较:“七权分工”vs.“三权分立”” 东方学刊. 2020,(03)
- 彭定光, 陈新. 2020. “论中国制度优势的政治伦理基础.” 伦理学研究. 2020,(04)
- 章庆林. 2020. “论中国政治制度在新冠肺炎疫情防控中的优势.” 闽江学院学报. 2020, 41(03)
- 胡鞍钢. 2020. “充分发挥中国制度优势.” 学术界. 2020,(02)
- 虞崇胜. 2020. “提升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秉赋:超越制度优势的国家治理现代化目标.” 探索. 2020,(02)
- 石仲泉. 2020. “中国之治”:党和国家制度建设的伟大工程——兼论中国特色社会主义政治体制改革新路” 中国青年社会科学. 2020,39(01)
- 樊欣. 2019. “论中国特色社会主义政治制度的合法性优越性.” 科学社会主义. 2019,(05)
- 樊鹏. 2019. “改革时代的政治领导力:制度变革与适应调整.” 科学社会主义. 2019,(01)

- 黄小钊. 2018. “坚定中国政治制度自信.”前线. 2018,(12)
- 燕继荣. 2018. “中国改革的普遍意义——40年中国政治发展的再认识.”浙江社会科学. 2018,(09).
- 肖新平. 2018. “审视中国历代政治制度史 建立应有的文化自信自知——读《中国历代政治得失》.”人文天下. 2018,(15)
- 赵卢雷, 王嫦. 2021. “长期执政条件下理解“党领导一切”的三重维度.”厦门特区党校学报. 2021,(01)
- 蒙慧; 田源. 2020. “疫情防控中维护党中央权威和集中统一领导的制度优势探析.”中共南京市委党校学报 2020. 10.
- 刘燕妮. 2020. “新时代加强党的全面领导的关键要素和战略路径.”中共济南市委党校学报. 2020,(05)
- 杨彬彬. 2020. “党的全面领导制度:概念、特点与实现机制.”思想理论教育. 2020,(07)
- 孙志香. 2020. “新时代中国特色国家安全道路创新研究.”科学社会主义. 2020,(03)
- 董树彬. 2021. “中国共产党在新型政党制度中领导地位的生成逻辑.”上海交通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21,29(01)
- 张志元. 2021. “坚持党的领导 推动工业高质量发展.”辽宁日报 2021-02-25
- 高飞. 2021. “党的领导融入公司治理实践探索.”新长征(党建版). 2021,(02)
- 李海青. 2021. “使命型政党领导能力与2035年远景目标的实现.”人民论坛·学术前沿. 2021,(01)
- 张亮亮. 2021. “论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的最大优势是中国共产党领导——基于三个分析视角的解读.”中央民族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21-01-15
- 李晴; 刘海军. 2021. “党的领导制度引领国家治理现代化的路径分析.”长白学刊 2021(1).

2 한글

- 김규철. 2020. “중·러 군사협력, 동맹인가 일시적 협력인가?” 『중소연구』 44 (1호): 169-213.
- 김우형. 2012. “중국의 에너지자원 전략과 한국의 통상전략.” 『한국동북아논총』 65: 5-20.
- 김외현. 2019. “중국 대만에 무력사용 포기 않는다.” 한겨레 신문 01.02. <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76754.html#cb> (검색일: 2021.06.23.).
- 김흥규, “중국의 정책결정과 민주집중제,” 『국제정치논총』 제 44권 1호 (2004), p.426-427.
- 강현우. 2021. “중국 반도체 자급률 15.9%...요원한 ‘반도체 굴기.’” 한국경제 2021. 02.24.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2247584i> (검색일: 2021.05.21.).
- 남궁영, 김원규. 2013.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간 분쟁의 함의: 공격적 현실주의적 접근.” 『세계지역연구논총』 31 (1): 1-42.
- 손인주. 2020. “두려움의 정치: 시진핑 권력강화의 심리적 동인.” 『한국정치학회보』 제 54 (1): 137-160.
- 안승섭, “빈민층 쫓아낸 中 베이징시 인구 17년 만에 첫 감소,” 연합뉴스 2018.0.1.22.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2082900074> (검색일: 2021.06.27.).
- 이기현, 2018. “중국의 한국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적 불편과 희망적 사고.” 『국제관계연구』 23 (2) (2018): 41-65.
- 이태규, “중국의 인구 역전...세계경제 복병 우려,” 한국일보 2021.05.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012570000238> (검색일: 2021.06.29.).
- 이다비. 2019. “화웨이, 美 ‘거래금지’에 발끈...“소송도 불사.” 조선일보 05.1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6/2019051602150.html (검색일: 2021.05.05.).

- 이동률, “중국 주변외교의 진화와 대중국 통일외교의 함의,” 『KINU통일+』 (여름)호 (2016), pp. 41-48.
- 이지예·이재우, “미중 1단계 합의 발표...무역 분쟁 돌파구 찾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4_0000860274 (검색일: 2019. 12. 14).
- 유재광. 2021. “중국-호주 관계 악화와 그 원인,” 중국전문가포럼 (CSF) 전문가 오피니언 01.25.: 1-5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1058&mid=a20200000000&board_id=4 (검색일: 2021.06.21.)
- _____. 2020. “CVOID-19 와 미중 패권경쟁의 조기소환,” 중국전문가포럼 (CSF) 전문가 오피니언 10.25.: 1-5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38715&mid=a20200000000https://csf.kiep.go.kr/issueInfo.es?mid=a20200000000&board_id=4&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tPage=7&pageCnt=10 (검색일: 2021.06.21.),
- 정주영,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쟁점과 전망,” 『중국지식네트워크』 제 13권 13호 (2019), p. 127-160.
- 조영남. 2015. 시진핑 일인체제가 등장하고 있는가? 『국제·지역연구』 24 (3): 127-153.
- 조은교(2021),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SR) 전략과 시사점>, 산업경제 2월호, 산업연구원
- 최원석. 2020. “[5Q경제] 과연, 화웨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선일보 05.2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4/2020052401854.html (검색일: 2021.05.20.).
- 최원석. 2015.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소득 불평등: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25 (1): 189 - 216.
- 최인준. 2021. “반도체 대란 원인은美中갈등... 미·유럽 자국생산은 비현실적,” 조선일보 04.02.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4/02/AY5NHEAXS5ASLMJOS4TEYOSOIM/ (검색일: 2021.05.15.).
- 최현준. 2021. “더 어려워진 중국 ‘반도체 굴기’...“반도체 부족, 미국 제재 탓,” 한겨레신문 04.1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0850.html (검색일: 2021.05.16.).

홍제성. 2016. “아베 ”‘남중국해’ 국제법따라야“ vs 시진핑 ”日 언행신중해야. 연합뉴스 09.05. <https://www.yna.co.kr/view/AKR20160905178452073> (검색일: 2021.02.05.).

3 영문

Bing, Song. 2019. “The West May Be Wrong About China’s Social Credit System,” <http://onlinelibrary.wiley.com.ssl.access.yonsei.ac.kr:8080/doi/pdf/10.1111/npqu.12191>

Birnbaum, Emily. 2019. “House passes legislation banning government from buying Huawei equipment,” the Hill Dec., 16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474790-house-passes-legislation-banning-government-from-buying-huawei-equipment> (검색일: 2021.05.18.).

Bojan, Pancevski. 2020. “U.S. Officials Say Huawei Can Covertly Access Telecom Networks,” Wall Street Journal Feb., 12 <https://www.wsj.com/articles/u-s-officials-say-huawei-can-covertly-access-telecom-networks-11581452256> (검색일: 2021.05.17.).

CEBR(2020), <World Economic League

Dziedzic, Stephen. 2020. “What’s behind Australia’s response to the Chinese Government’s crackdown on Hong Kong.” *ABC* July 12 <https://www.abc.net.au/news/2020-07-12/australia-responds-to-chinese-government-crackdown-on-hong-kong/12446586>.

Fowler, Michael. 2020. “That’s not leadership’: Andrews warns cutting Belt and Road will hurt Australian business,” *Age* December 9 <https://www.theage.com.au/national/that-s-not-leadership-andrews-warns-cutting-belt-and-road-will-hurt-australian-business-20201209-p56m18.html>.

Huntington, Samuel.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Y: Yale University Press, 1968), pp. 398-399.

- Johnson, James. 2021. "The end of military-techno Pax Americana? Washington's strategic responses to Chinese AI-enabled military technology." *Pacific Review* 34 (3): 351-378
- Leonard, Jenney, Keith Laing, Josh Wingrove. 2021. "In call with CEOs, Biden doubles down on a \$50 billion plan to invest in chips Fortunes April 13 <https://fortune.com/2021/04/13/in-call-with-ceos-biden-doubles-down-50-billion-plan-invest-chips/> (검색일: 2021.05.20.).
- Malik, J. Mohan. 2000. "China an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2 (3): 445-478.
- Mearsheimer, John J. 2010.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3 (4): 381-396.
- Milanovic, Branko. 2021. A New Oligarchy Can Be Restrained Only by the Government That Made It Foreign Affairs (Feb. 2021), pp. 1-10.
- Payne, Sebastian and George Parker. 2020. "Boris Johnson set to curb Huawei role in UK's 5G networks." *Financial Times* July 13 <https://www.ft.com/content/e4b7f816-00cc-4dc5-bb97-4e761200022a> (검색일: 2021.05.19.).
- Reichert, Corinne. 2020. "US finds Huawei has backdoor access to mobile networks globally, report says," *Cnet* Feb., 12 <https://www.cnet.com/news/us-finds-huawei-has-backdoor-access-to-mobile-networks-globally-report-says/> (검색일: 2021.5.18.).
- Panda, Ankit. 2014. "Obama: Senkakus Covered Under US-Japan Security Treaty." *Diplomat* April 24 <https://thedi diplomat.com/2014/04/obama-senkaku-covered-under-us-japan-security-treaty/> (검색일: 2021.06.01.).
- Pant, Harsh V. 2017. "India, Japan, Australia, and the US: The Return of Asia's 'Quad'." *Diplomat* April 28 <https://thedi diplomat.com/2017/04/india-japan-australia-and-the-us-the-return-of-asias-quad/>

- Packham, Colin. 2020. "Australia says world needs to know origins of COVID-19." *Reuter* Sept., 26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australia-china-idUSKCN26H00T>.
- Reynolds, Andrew. 2016. "What The South China Sea Ruling Means For Australia," *Huntington Post* July 16 https://www.huffingtonpost.com.au/andrew-reynolds/what-the-south-china-sea-ruling-means-for-australia_a_21432489/.
- Richardson, Sophie. 2018. "China and human rights: Is Australia 'making a difference'?" *Canberra Times* Aug., 29 <https://www.hrw.org/news/2018/08/29/china-and-human-rights-australia-making-difference>.
- Schmidt, Michael S., Keith Bradsher and Christine Hauser. 2012. "U.S. Panel Cites Risks in Chinese Equipment," *New York Times* Oct., 8 <https://www.nytimes.com/2012/10/09/us/us-panel-calls-huawei-and-zte-national-security-threat.html> (검색일: 2021.05.16.).
- Shepardson, David, Karen Freifeld, Alexandra Alper. 2020. "U.S. moves to cut Huawei off from global chip suppliers as China eyes retaliation," *Reuter* May 15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huawei-tech-exclusive-idUSKBN22R1KC> (검색일: 2021.05.20.).
- Shirk, Susan L. 2018. "China in Xi's 'New Era' : The Return to Personalistic Rule." *Journal of Democracy* 29 (2). 22-36.
- Tanzi, Alexander. 2021. China's Growth Set to Drive World Economy in Post-Pandemic Years. *Bloomberg* April. 7.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4-06/china-s-growth-set-to-drive-world-economy-in-post-pandemic-years> (검색일: 2021.05.21.).
- Taylor, Bob. 2009. "Australia, China ties thaw as military chiefs meet." *Reuter* Oct., 15 <https://fr.reuters.com/article/australia-china-idUSSYD54230420091015>.
- Thayer, Carl. 2020. "Australia has aligned itself with the United States in

supporting UNCLOS and the 2016 Arbitral Tribunal ruling.” *Diplomat* July 27 <https://thediplomat.com/2020/07/australia-abandons-its-neutrality-on-the-south-china-sea-maritime-disputes/>.

Westbrook, Tom. 2017. “Australia, citing concerns over China, cracks down on foreign political influence.” *Reuter* Dec., 5 <https://www.reuters.com/article/us-australia-politics-foreign-idUSKBN1DZOCNA>.

Westcott, Ben. 2020. “China Says Relations with Australia Are in a Sharp Downturn and It’s all Canburra’s Fault.” *CNN* Nov.18 <https://edition.cnn.com/2020/11/18/australia/australia-china-japan-military-intl-hnk/index.html>.

Wolf, Zachary. 2021. “The origin of Covid is now an intelligence operation.” *CNN* 05.26. <https://edition.cnn.com/2021/05/26/politics/what-matters-covid-investigation/index.html> (검색일: 2021.06.21.).

Abstract

Executive Summary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This research examines the future of China, which would play a pivotal role in determining the future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hance of regime survival, the prospect of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the chance of conflict and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it aims at offering a comprehensive image of China around 2030. China's future will not b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present image of contemporary China. According to the research, China will remain highly authoritarian with a little prospect of democratization while sustaining its economic growth although the growth rate declines. But China's foreign relations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India and Australia will deteriorate as a result of heightened security competition elsewhere. The research provides a set of future strategies to a policy community in South Korea such as decreasing levels of trade dependence on China, considering the return to a quasi alliance system between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and rebuilding communication channels with China's top leadership.

중국의 미래, 2030

인 쇄	2020년 12월 27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2020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0858-54-0 (93300)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